

# 강원도 주민제안 활성화 연구







## 강원도 주민제안 활성화 연구


연구진

전대욱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최인수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 Contents

<b>I</b>	<b>연구의 배경 및 목적</b> .....	04
<b>II</b>	<b>참여 및 제안에 관한 이론적 관점</b> .....	06
<b>III</b>	<b>제안제도의 개요 및 강원도 제안제도 현황</b>	
	1. 제안제도의 개요 .....	18
	2. 강원도 제안제도 현황 .....	21
<b>IV</b>	<b>국민·주민 참여제도 운영 사례분석</b>	
	1. 국내 지방자치단체 운영의 국민·주민 참여제도 .....	34
	2. 해외 국민·주민 참여제도 .....	46
	3.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제안제도 인센티브 운영 현황 .....	51
	4. 사례 연구를 통한 시사점 .....	54
<b>V</b>	<b>강원도 제안제도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언</b>	
	1. 강원도 제안제도 홍보의 다각화 필요 .....	56
	2. 제안제도 심사위원회의 전문성 강화 .....	58
	3. 제안 주제의 구체화 및 세분화를 통해 제안의 질적·양적 만족도 제고 .....	59
	4. 제안제도 심사·채택 참여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제도 활성화 .....	60
	[참고] 제안제도 활성화를 위한 학습조직화 전략 .....	63
	정책제언(요약) .....	67
	<b>참고문헌</b> .....	68

## I

##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참여 민주주의 확산 기조에 따라 강원도민의 도 제안제도 접근성 개선과 도정 참여도 제고를 위한 도 제안제도 활성화 방안 모색 필요
- 제안 참여방법을 알지 못하여 우수한 제안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안활동에 적극 참여하지 못하는 사례 발생
- 강원도 제안제도에 대한 도민 관심도 하락에 따라 관심도 제고를 위한 제안 채택율 제고 방안 마련 필요
  - 관련 부서 담당자의 제안 심사 및 평가에 대한 부담감 존재(업무과중 등)
- 우수제안으로 채택된 사안에 대해 시책추진이 필요하나, 현안업무 가중 및 인센티브 부족 등으로 시책 추진에 소극적 접근
  - 우수제안에 대한 시책 추진 시, 인센티브 마련 필요
- 본 연구는 강원도민·공무원 우수제안의 도정 반영을 통한 행정업무 혁신을 촉진하고, 강원도의 주민제안 활성화 방안 및 각 실·국의 제안업무 추진 기반으로 활용하는데 있음
- 강원도 제안활동 참여도 제고방안 연구
  - 제안제도 관련 홍보방안 모색
  - 전문적·창의적인 제안이 접수될 수 있는 방안 모색

- 제안심사 및 평가 활성화 방안 연구
  - 제안심사 및 평가 시, 심사 담당자의 능동적 접근방안 마련·모색
- 채택제안에 대한 시책추진 활성화 방안 연구
  - 채택제안 사후관리 방안 모색
  - 시책추진 담당자의 능동적 추진을 위한 인센티브 방안 모색

## II

## 참여 및 제안에 관한 이론적 관점

### 1. 정책과정에서 참여(Participation)의 수준

- Rowe & Frewer(2000)는 정책과정에서 국민관여(public involvement)를 정책전문가, 정부 그리고 일반 대중(국민, 시민, 주민 등) 사이에 일어나는 의사소통 방식과 정책과정에서 대중 의견이 투입되는 참여(participation)로 구분함
  - 의사소통(communication)은 가장 낮은 수준의 관여로 정책 관련자들 간 정보가 소통 및 공유하는 상황을 의미. 주로 하향식 정보 소통 또는 양방향이나 아닌 일방향으로 정보가 흐르는 형식의 의사소통 구조임
  - 참여(participation)는 대중 여론을 조사하여 의견을 정책과정에 반영 또는 대표를 선출하여 적극적으로 정책과정에 참여하는 것으로 대화(dialogue)와 양방향 정보 교환 구조임
- Rowe & Frewer(2000)는 관여(involve), 참여(participation)에서 어느 한쪽이 옳고 그름, 혹은 좋고 나쁨으로 판단하지 않음
  - 다만, 정책과정에서 가장 바람직한 대중의 관여 형식은 상황에 따라 결정된다고 설명
  - 예를 들어 전문가적 정보 및 지식이 필요한 정책의 경우, 가치판단이 많이 요구되는 정책결정에 비해 낮은 수준의 관여가 더 적절할 수 있다고 봄



표 2-1 | 대중참여의 이론적 논의 정리

연구자	주요 내용
OECD (20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책참여를 정보제공(information), 협의(consultation), 능동적 참여(active participation)으로 구분</li> <li>- 정책형성, 집행 및 평가의 정책과정에서 국민이 효과적 참여를 위해</li> <li>- ▲정보제공은 필수적인 기본 전제 ▲국민과의 협의는 정책 전 과정에서 핵심적 내용 ▲능동적 참여는 적극적으로 추구되어야 할 것으로 제시</li> </ul>
Eidsvik (197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책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시민참여의 유형화</li> <li>- 정보(information), 설득(persuasion), 협의(consultation), 협력(cooperation), 통제(control)</li> </ul>
한상일 (200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참여 제도의 유형화</li> <li>- 정부수여형, 포괄적 협의형, 구체적 협의형, 적극형</li> </ul>
박민성·최성락 (200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민들의 참여 정도를 기준으로 참여모형</li> <li>- 소극적 민·관협치형: 적극적 시민참여 보장 없이 형식적 제도화</li> <li>- 적극적 민·관협치형: 지역총회, 우선순위 결정기준 마련</li> <li>- 소극적 민·관협치형: 포괄적 예산편성 방향에 주민참여</li> <li>- 적극적 민·관협치형: 예산편성 이전 및 편성 과정에 주민참여</li> </ul>
채중헌 (20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참여수준에 따라 유형화</li> <li>- 정보제공: 정보공개, 공람, 정책홍보, 설명회</li> <li>- 의견수렴: 공청회, 진정, 민원, 여론조사</li> <li>- 자문협의: 자문위원회, 공론조사</li> <li>- 주민참여: 공동협의기구, 공동조사, 민관합동위원회</li> <li>- 주민결정: 주민투표, 시민배심원제</li> </ul>
김지수 (20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민참여 정의를 정부의 의사결정에 대한 대중의 참여를 의미하는 시민참여(citizen participation, citizen involvement) 또는 대중참여(public participation, public involvement) 개념과 일치한다고 해석</li> </ul>

## 2. 정책과정에서 참여의 의미

- 정책과정에 대중참여는 사회적 가치를 주도적으로 창출하겠다는 의미를 내포함
- 이에 대해 한국행정학회(2019)는 사회적 가치를 다음과 같이 재정의함. 사회적 가치는 특정한 역사적·사회적 맥락에 위치한 각각의 공동체들(공동체의 구성요소)의 실천 영역에서 담론 윤리에 기초한 민주적 정치과정과 정치적 공론 영역을 통해 사회적 행위자들이 자신의 존재 상태인 안녕(공동선, 共同善)과 내적인 관계에 있는 인권, 안전, 건강·

복지, 질 좋은 노동·일자리 창출, 사회적 약자 지원, 상생협력, 공동체복원, 지역경제의 활성화, 책임윤리, 환경보전, 참여 등을 구현하는 가치임

- 즉, 사회적 가치는 번영할 수 있는 능력과 피할 수 있는 고통을 겪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을 발전시켜서 사회적 존재인 인간의 안녕을 실현할 수 있도록 사회를 조직화하는 가치임
- 따라서 정책과정에 대중참여는 ▲(주체) 개개의 공동체 구성요소가 ▲(철학) 담론 윤리에 기초하여 ▲(제도) 민주적 정치과정 및 정치적 공론을 활용하여 ▲(목적) 공동체의 선을 지향하는 것을 의미함

표 2-2 | 사회적 가치에 관한 이론적 동향

연구자	주요 내용
윤태범(2017)	• 공동체에 의해 부여 및 공유되며 사회에 의해 의미가 부여되는 것
박명규(2019)	• 하나의 사회가 바람직한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실천적으로 추구하는 정책적 개념
고동현 외(2018)	• 현실의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것
송용한(2017)	• 다양한 사회공동체들의 특성 및 상황에 따라 가변적으로 변하는 시대적·사회적 요구에 대해, 사회적 가치는 대응성과 현실 적합성을 품고 있어야 함을 강조
영 파운데이션	• 사회혁신은 사회적 목표를 충족시키는 새로운 아이디어 • 충족되지 못한 필요를 충족시킬 새로운 아이디어를 디자인하고, 개발하고, 발전시키는 과정
스탠포드대학 소셜이노베이션 리뷰	• 사회문제에 대한 새로운 해결책 • 즉 기존 해결책보다 효과적·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해결책이며, 해결책에서 창출된 가치는 주로 사적인 개인보다 사회 전체에 축적
스탠포드대학 소셜이노베이션 리뷰	• 사회문제에 대한 새로운 해결책 • 즉 기존 해결책보다 효과적·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해결책이며, 해결책에서 창출된 가치는 주로 사적인 개인보다 사회 전체에 축적
토론토 사회혁신센터	• 현존하는 사회적·문화적·경제적·환경적 도전을 해결함으로써 인간과 지구에 혜택을 가져다줄 수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 • 사회혁신은 공공에 도움이 되는 아이디어이며, 진정한 사회혁신은 시스템 변화
OECD 지역경제고용개발 사회혁신 워크숍	• 사회혁신은 다양한 사회적 요구에 대한 시민사회의 역할을 확장 및 강화시키는 관점의 전략, 개념, 아이디어, 조직적 패턴을 통칭
EU TEPS	• 사회적 필요를 충족시키면서 동시에 새로운 사회적 관계와 협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새로운 발상(상품·서비스·모델)으로써 문제해결을 위한 사회적 역량(사회적 자본)을 축적하는 과정

### 3. 대중참여와 사회혁신<sup>1)</sup>(사회적 가치)

- 최근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정치·행정적 흐름을 살펴보면, 사회 구성원들의 능동적·자발적 참여를 통한 긍정적인 사회변화, 더 나아가 사회혁신에 관한 관심이 높아짐
- 제프멀건(2011)은 사회적 수요 해결을 위해 시민사회가 함께 창조적 아이디어를 만들고 실행하면 확산하는 일련의 과정을 사회혁신으로 정의함
  - 이러한 사회혁신은 소수의 정부관료와 전문가들이 만든 일방적인 해결책으로 불가능함을 강조함
- 박명규(2018)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다수 구성원들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혁신의 시너지를 제고할 수 있는 사회혁신 생태계를 구축해야 하며, 교육개혁 및 공공부문의 공공성 강화를 통해 책임을 제도화할 것을 강조함
- 일부 폐쇄된 전문집단에서 벗어나 사회구성원이 함께 혁신을 창출한다는 사회혁신의 논의는 열린 혁신(Open Innovation)개념과 시민참여 기반의 민·관이 공동으로 창의적 해결법을 찾아내는 공동창조(Co-Production)의 개념으로 연결됨
- 사회혁신, 공동창조의 방법론적 관점으로 최근 주목받고 있는 참여방법으로 시민소싱(Citizen Sourcing), 클라우드소싱(Crowdsourcing), 리빙랩(Living Lab), 서비스 디자인씽킹(Service Design Thinking) 등을 들 수 있음
  - 이와 같은 혁신적 참여방법이 등장하면서 우리나라 공공참여 정책에서도 새로운 방법들을 적용·실행에 옮기고 있음
- (참고) 시민소싱(Citizen Sourcing)이란?
  - ‘디지털 사회혁신 영역에서 정부가 크라우드소싱을 통해 집단지성을 활용하는 것’으로 정의

1) 박정윤·최현선(2020)

- Brabham(2008)은 클라우드소싱에 대해 수많은 개인들로 연결된 분산네트워크를 통해 얻은 신선한 아이디어와 집단 지혜(집단 지성)를 기반으로 창의적 문제해결 대안을 창출하는 웹기반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라 언급함
- 클라우드소싱이 공공영역에 적용될 때, 시민소싱이란 용어를 사용함
- 이맹주(2019)는 시민소싱을 공익활동, 즉 사회문제 해결 및 공공서비스 생산 등 공적 분야에서 시민의 재능이나 자원을 획득·활용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밝힘
- 시민소싱을 정부가 불특정 시민으로부터 창안,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집하여 공공 분야에서 열린혁신(Open Innovation)을 추구하는 시민참여의 방식 중 하나로 보고 있음
- 이맹주(2019)는 시민소싱과 시민참여 유형을 소극적과 적극적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주민제안제도의 경우 시민소싱 주체는 정부이고, 시민소싱 역할은 소극적인 영역에 속함
- 이맹주(2019)는 시민참여를 참여의 영향력을 기준으로 정책형성과 정책집행에서 제안제도를 다음과 같이 분석함
-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음

그림 2-1 | 시민참여 유형 및 참여의 영향력에 대한 분석

시민참여 유형	시민소싱 주제		참여의 영향력	정책형성(의사결정)			
	정부	시민		← 부분참여	→ 전폭참여		
시민소싱 역할	소극적	국민제안	기부/봉사	정책 집행 (사실행위)	부분참여 ↑	국민제안	공론화 위원회
	적극적	공론화 위원회	공동생산		전폭참여 ↓	불우이웃 돕기	시민소싱

출처 : 이맹주(2019)

## 4. 대중(국민·시민·주민) 참여의 제도적 정의<sup>2)</sup>

- (정의) 국민이 삶의 ①문제를 해결하거나 ②공익 증진에 목적을 가지고 행정과정의 ③다양한 부문에서 ④다채로운 형태의 의사결정에 권한을 행사하거나 의견을 제시하는 것

① 문제해결	• 현대사회에서 개인이나, 집단, 지역이 다양한 형태로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를 다양한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
② 공익증진	•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성에 기반한 정책 및 사업들을 수행하는 것임. 이 과정에서 참여 국민들의 알권리와 효능감 증진과 정책의 투명성 향상, 정책 집행의 효과성 등을 제고
③ 다양한 부문	• 의제 형성, 정책화, 집행, 평가 등 참여의 전 과정적 의미
④ 다채로운 형태	• 단순 참여, 제안, 숙의숙성 등 참여의 수준 의미

## 5. 대중참여형 제안제도<sup>3)</sup>

- 제안(提案, suggestion)에 대한 사전적 정의
  - 국어대사전에서 안이나 의견으로 내놓음으로 정의
  - 이는 더 나은 상태를 위해 의견을 제시하는 행위로 해석할 수 있는데 특정한 상황(주로 문제가 발생했거나 바람직하지 않은 상태에서 답보된 상태)에 대한 개선을 위해 방향성 및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행위로 이해할 수 있음
- 제안제도는 19세기 영미권에서 민간에서 소속 직원으로부터 생산방법, 업무 효율성에 관한 개선방안을 받아 조직 및 경영혁신의 수단으로 시작됨<sup>4)</sup>
  - 제안제도는 조직원들을 제도적으로 경영에 참여시키는 도구라 해석할 수 있음

2) 행정안전부(2021)

3) 박정윤·최현선(2020)

4) 충청북도교육연구정보원(2021), 충청북도교육청 공무원 제안 제도 활성화 방안

- 세계 각국에서 실행되는 국민(시민)참여형 제안제도는 기업의 제안제도를 공적영역에 적용시킨 결과이며, 민주적 참여를 통한 정부업무개선, 상향식 소통 및 집단지성을 통한 혁신 창출의 제도로 자리 잡음
- 공적인 제안제도는 국민과 공무원의 창의적 의견과 고안(考案)을 정부시책의 개선에 반영하여 행정 능률성 제고 및 업무혁신 촉진, 정부정책과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 도모를 위한 참여행정(Participatory Administration)의 제도로 정의<sup>5)</sup>
- 공적 영역에서의 제안제도는 관련 규정 및 조례에서 명시함

분류	주요 내용
국민 제안 규정 (제1조 목적)	• 국민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考案)을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그 운영에 반영함
공무원 제안 규정 (제1조 목적)	• 국가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考案)을 행정 운영의 개선에 반영함
강원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제1조 목적)	• 강원도정에 도움이 되는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考案)을 장려·개발하여 도정시책에 반영함

- 제안제도 자체가 완전성을 갖춘 것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한계점을 지적하고 있음
  - 제안제도가 산업혁명 시대 제조업 분야의 생산성·경영개선을 위해 시작된 제도 이기에 현대 생활양식 및 조직운영 패러다임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단점을 지님
  - 결국, ▲제안의 유용성 ▲실행률 저하 ▲조직원의 참여의지 저하 등 문제 발생
- 이에 대해 어용일(2009)은 민간기업의 제안제도 현대화 방식을 논의하면서 제안제도에 대한 ▲조직원 인식 개선 교육 ▲제안양식의 단순화 ▲제안프로세스 및 포상프로세스의 구분 ▲사용자 중심의 제안처리 전산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함
  - 어용일(2009)은 제안제도의 비활성화에 대해 크게 3가지로 분석함. ① 많은 조직 구성원들은 제안을 자신의 일과 별개로 인식, 즉 제안을 위한 제안이 되는 것으로

5) 이경호(한국행정학회 행정학 전자사전 중) 검색어: 제안제도

인식하고 부담감을 가진 ②제안제도 자체가 오래돼서 현 행정·경영환경에 맞지 않음<sup>6)</sup> ③조직원들의 낮은 관심도 및 의식변화 없이 제안제도 자체만 수차례 바뀜

- 결국, 시대 변화 속에서 제안제도가 유용성을 상실하지 않기 위해 끊임없는 제도 운영 방식의 혁신 및 개선이 요구됨
  - 사회적 가치 논의에서도 등장하는 대응성 및 적실성 문제로, 혁신과 창의성을 이끄는 제도들은 필연적으로 시대적 변화에 적응하는 유연성을 갖추어야 함

## 6. 제안 제도: 민주적 참여제도

- 국민참여제도의 유형은 다양하며 제안제도를 비롯한 민원, ombudsman, 모니터링단, 참여예산, 시민감사, 만족도 조사, 주민투표 등 제도들은 우리 사회에 익숙한 참여수단이며 보편적으로 활용됨
- OECD(2001)는 여러 유형의 참여제도들을 시민의 정책참여수준과 정책단계별로 유형 구분을 시도한 바 있음

구분	주요 내용
정책참여수준	정보제공 - 순차적 합의 - 능동적 참여
정책단계별	설계 및 기획 - 집행 - 평가

- 이와 같은 분류에 의하면 제안제도는 ▲정책참여수준으로는 능동적 참여에 해당하며 ▲정책단계 기준으로는 설계 및 기획 단계에 해당함

- 제안제도와 민원제도 간 차이
  - 상기한 OECD 기준에 따르면 제안제도와 민원제도는 다른 유형으로 구분됨

6) 우리나라 기업 및 행정기관에서 제안제도를 도입한 때는 1970년대 산업화 시기임. 당시 제안제도는 제조업에 맞춰 제도를 만들어 운영했기에, 현재 서비스 중심의 산업구조 및 행정 정책 시스템에서 적용하기 어렵다고 지적함

- 민원제도는 ▲정책참여수준에서 정보제공에 해당 ▲정책단계 기준으로 집행단계에 해당
- 제안은 정책설계를 위해 아이디어를 제공하는데 기여하며 국민이 능동적 영향력을 가지고 참여하는 방법인데 반해, 민원은 이미 실행되고 있는 정책의 집행과정에서 고충·문제가 발생했을 때 행정의 입장(정보)을 요구하는 수준의 참여 방법이라는 점에서 상이함
- 국민참여제도는 공적 제도로서 기본적인 ▲공익성 ▲공공성 ▲공정성 ▲투명성을 유지해야 함
  - 참여과정의 자발성(국민이 행정성과를 위해 강제로 동원되지 않음), 개방성, 포용성, 참여 목적에 따라 적절하게 설계된 접근 등도 중요함
  - 이와 같은 속성은 공적인 국민참여제도가 사회의 유익과 본연의 효용성을 상실하지 않기 위해 최소한 고려해야 할 사회적 가치 요소라 할 수 있음
- 다양한 참여제도 중 제안제도는 제도 유형의 특성상 정보제공, 합의 수준이 아닌 능동적 참여가 이루어져야 하며 실질적으로 정책설계(혹은 집행과정의 개선)에 반영될 수 있어야 함

## 7. 현행 제안제도에서 나타난 문제점

- 제안제도 관련 최근 연구에 따르면 지속적으로 제안의 질과 공익성, 미흡한 정체성·인지도·접근성의 문제, 평가기준에 대한 신뢰도 부족, 일선 공무원의 피로감 등이 나타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음<sup>7)</sup>

7) 박정윤·최현선(2020)



## 공익성 및 신뢰도 저하

- 관련 연구에 따르면 제안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제안의 공익성 및 공공성에 대한 전반적인 회의감을 지적함
- 현 제안제도에서 공익성 및 공공성을 심사기준에 포함하지 않음
  - (사례) 일본 지자체 시민제안제도는 보편적이고 흔히 볼 수 있는 제안제도이지만, 최소한의 공익 기준에 대해서 확고한 우선순위를 부여함
  - 공적인 국민참여형 제안제도의 존재가치는 무엇보다 공익성 및 공공성이라는 사회적 가치에 있음
- 제안제도는 전 국민이 활용할 수 있는 제도이지만 ‘채택될 수 있는 요령’을 익힌 소수의 사람들이 포상을 위해 과도하게 반복 참여하는 상황은 심각한 문제로 지적
  - 이는 참여제도의 본연의 취지보다 ‘보상’에 집중될 경우, 많이 일어나는 현상임
- 수익활동이 아니라도 개인욕구(사익이나 개인의 편리성 추구) 또는 특정 집단이기주의(지역 또는 이익단체의 민원성 제안)가 작용하는 제안이 많아 제안의 공공성 및 공익성 등 사회적 가치 저하가 우려됨
  - 이와 같은 현상으로 일선 담당자(처리기관)의 의욕저하, 신뢰도 저하 발생은 물론, 본 제도를 접한 청년 세대(MZ세대)의 의구심도 증폭됨

## 획일적인 참여제도 운영방식의 문제

- 현 제도는 300개가 넘는 정부조직 및 지방자치단체들을 대상으로 공모와 자유제안 모두 포괄함
  - 제안제출 규격, 채택 및 포상 기준, 자체적 성과평가기준(채택률, 실시율 등) 등에서 획일화됨
- 박정윤·최현선(2020)은 제안제도에서 획일화의 원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문제를 지적함

- 각 제도의 목적에 따라 일부 제안제도는 명확한 목적 안에서(주로 공모제안) 높은 수준의 전문성을 요구, 기술적으로 고도의 접근장벽을 설치하고 있음을 문제점으로 지적함
- EU의 제안제도는 사회·법·제도적 영향력이 커서 폭넓은 사회적 공감을 얻어야 채택될 수 있으며, 실행 전 제안의 파급력을 전문적으로 심사함
- 제안의 목적에 따라 접근방식, 운영방식, 심사기준 등 다르게 설계되어야 하는데, 국민제안제도는 모든 제안을 동일한 유형 범주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처리한다는 점에서 문제임
  - 제안제도 목적에 맞춰 명확한 정체성과 목적에 부합한 운영방식 및 심사기준을 정립할 필요 있음
  - 이는 제안제도 개성 및 차별성을 정립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음
  - 현재 제안제도와 유사한 참여제도들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병렬적으로 운영되면서 제안제도의 차별성을 갖추는데 제한점으로 나타남
- 획일화의 또 다른 문제점으로 모든 제안을 ‘채택-불채택’ 기준으로 심사하고, 채택된 의견을 기계적으로 처리기관들이 실행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점임
  - 실행률 제고를 위해 일정 정도 실행의 의무를 강조할 필요는 있겠으나, 우수한 취지와 양질의 아이디어 제안이라 해도 해당 기관이 정해진 기간 내에 실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님
  - 이렇게 실행률 의무가 획일적으로 적용되면 처리기관들은 ‘실행이 용이한 제안’들을 우선 채택하며, 제안에 익숙한 제안자들일수록 ‘쉽게 채택될 만한 제안’을 접수하는 등, 공익성 저하와 연계됨

## 제안제도의 혁신성 문제

- 제안제도는 과거의 제조업 기반 기업들이 사용하던 직원 생산성 및 업무효율성 증대를 위해 ‘제안함(suggestion box)’에 아이디어나 의견을 접수했던 방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음

- 이러한 경직된 제안함 방식에서 ▲접수자는 ‘채택/불채택’과 이에 따른 보상을 중요한 관건으로 여기며, ▲심사자는 ‘제안의 쓸모(유용도)’만을 중시하게 될 위험이 큼
- 제안처리기관들 간, 제안자들 간 상호 자유로이 소통하고 재밌게 의견을 보완할 수 있는 기제가 마련되어야 제안플랫폼이 활성화되는데, 현재 운영 중인 제안제도는 ‘블랙박스’에 가까운 제안함에 제안을 넣고 결과를 기다리는 방식으로 운영됨. 뿐만 아니라 플랫폼 UI도 경직된 형태로 설계됨
- 공적 제도도 시대 변화·흐름에 맞춰 지속적으로 ‘매력적·혁신적’인 진화가 필요함
  - 이는 제도의 실행역량과 연관성을 지님. 제안의 궁극적 목적은 ‘채택’이 아니라 ‘제안의 실행’에 있음
  - 우수한 아이디어를 모두 실행제안으로 선택할 수 없지만, 일부 우수제안에 한해 실행과정까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다면, 제안의 혁신성 및 공익성이 함께 확대될 수 있음

## III

## 제안제도의 개요 및 강원도 제안제도 현황

## 1. 제안제도의 개요

## 목적

- 국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정부시책 및 행정제도 개선에 반영하여 국민 참여 활성화 및 행정 업무 혁신 촉진

## 근거

- 국민제안: 「국민제안규정(대통령령)」
- 공무원제안: 「공무원제안규정(대통령령)」

## 발전과정 및 연혁

- 1997년 8월 22일, 시민참여의 행정서비스 공동생산 정책인 국민제안제도는 「민원 사무처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5369호) 제40조(국민제안의 처리)에 의거 실행됨
- 2006년, 온라인 국민신문고 사이트 출범하면서 민원과 국민제안제도의 접근성이 확산됨

- 2008년, 별도 운영되던 공무원제안제도가 국민제안제도와 통합되면서, 행정안전부 주도로 ▲제안 아이디어의 숙성 ▲실행결과 명시 ▲우수제안자 표창 등 제안제도 전 영역에 걸친 개선방안 마련됨
- 2011~2012년, 매해 우수한 제안을 선정·표창하는 중앙우수제안 심사과정에 ‘국민 평가제도’ 도입
- 2013년 4월 27일, 국민신문고의 국민제안시스템을 확대·개편한 ‘국민행복제안센터’ 개통
- 2017년, 공무원 및 국민제안제도의 실행규정이 전부 개정됨
- 국민제안 및 공무원제안제도의 연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표 3-1 | 국민제안 및 공무원 제안제도의 연혁 정리

국민제안	공무원제안
1997. 12. 국민제안 근거 마련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정 시행)	1963. 6. 공무원제안 근거 마련 (「국가공무원법」 개정 시행)
2005. 8. 국민신문고 ‘국민제안시스템’ 개통	1971. 3. 공무원 제안제도 최초실시(총리 지시)
2006. 5. 「국민제안규정」 제정	1973. 7. 「제안규정」 제정
2010. 5. 「국민제안규정」 일부개정 (국민제안 발굴 신설 등)	2006. 7. 「공무원제안규정」으로 전부개정
2011. 6. 「국민제안규정」 일부개정 (우수기관 포상 신설 등)	2007. 5. 국민신문고 ‘공무원제안시스템’ 개통
2015. 7. 「국민제안규정」 일부개정 (제안의 보완 개선 신설 등)	2011. 6. 「공무원제안규정」 일부개정 (우수기관 포상 신설 등)
2017. 1. 「국민제안규정」 전부개정 (채택제안 결정 등)	2015. 7. 「공무원제안규정」 일부개정 (제안의 보완 개선 신설 등)
2020. 4. 「국민제안규정」 일부개정 (제안 접수 등)	2017. 1. 「공무원제안규정」 전부개정 (채택제안 결정 등)
	2020. 4. 「공무원제안규정」 일부개정(제안 접수 등)

## 운영 구조

- 현재, 국민제안제도(공무원제안제도 포함)는 국민권익위원회와 행정안전부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이원체계에 의해 운영
  - 각 제안의 실질적인 채택심사 및 실행은 개별 기관(중앙정부조직, 교육청, 지방자치단체)이 담당

구분	주요 역할
행정안전부	• 제안제도 법령 총괄, 중앙우수제안포상, 제안활성화, 우수기관과 유공자 선정 포상, 제안제도 운영 확인 점검 등
국민권익위원회	• 국민행복제안센터 운영, 공무원제안시스템 관리·국민제안 규정 제5조 제2항 및 부패방지법 제12조제16호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개별 기관 (중앙행정부처, 시·도교육청,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 소관 제안의 심사 및 정책반영, 자체 우수제안 포상

## 운영 방법

- 일반제안과 공모제안으로 구분
  - 일반제안 : 국민과 공무원은 국민신문고, 전자우편(e-mail) 등을 통해 연중 자유롭게 제안 제출할 수 있음
  - 공모제안 : 행정기관은 특정 주제를 지정하여 일정기간 제안을 모집할 수 있음
- 접수된 제안은 접수한 날(공모제안의 경우, 공모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소관 부처 및 부서에서 심사하여 채택 또는 불채택 결정,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함
- 각 행정기관의 장은 채택제안의 제안자에게 포상할 수 있으며, 기관별로 채택된 제안 중 우수한 제안들은 자체 우수제안으로 결정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중앙우수제안으로 심사하도록 제도화하고 있음
  - 자체 우수제안 포상(각 행정기관) : 제안심사위원회를 통해 자체 우수제안 선정·포상 및 인센티브 부여(부상금·특별승급 등), 중앙 우수제안 추천

- 중앙 우수제안 포상(행정안전부) : 중앙 우수제안 심사위원회 심사 및 국민심사 등을 통해 중앙 우수제안 선정·포상(상훈, 부상금, 인사상 특전\* 등)
- 공무원제안의 경우 창안등급에 따라 특별승진·특별승급 등 특전 부여
- 채택된 제안은 국민제안규정에 의거, 제안자에게 통지된 실시 예정 시기까지 실행되어야 하며, 실시할 수 없는 사유 발생 시 제안자에게 통지해야 함

## 2. 강원도 제안제도 현황

### 1) 제안제도의 목적 및 방향

#### 목적

- 주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제안 발굴로 강원도 정책이나 행정제도에 우수 제안을 반영하여 행정 업무의 혁신을 촉진

#### 방향

- 강원도 정책수립에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여 주민이 주인이 되는 도정 운영 구현

### 2) 운영 근거

- 「국민 제안 규정」, 「공무원 제안 규정」, 「강원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및 시행규칙
- 강원도 및 시·군·구 지자체의 제안제도 조례·시행규칙 현황을 살펴본 결과 본청 포함한 8개 곳(42.1%)에서 운영

표 3-2 | 강원도 제안제도 조례 및 시행규칙 설치 현황

구분	조례명	시행규칙명	소관부서
강원도 (본청)	강원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강원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강릉시	-	-	-
고성군	-	-	-
동해시	-	-	-
삼척시	-	-	-
속초시	속초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속초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행정국 기획예산과
양구군	양구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양구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	기획감사담당관
양양군	-	-	-
영월군	-	-	-
원주시	원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원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행정국 기획예산과
인제군	-	-	-
정선군	-	-	-
철원군	철원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철원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	기획감사실
춘천시	춘천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춘천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시민주권담당관
태백시	태백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태백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기획예산담당관
평창군	평창군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평창군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행정과
홍천군	-	-	-
화천군	-	-	-
횡성군	-	-	-

근거 : 자치법규정보시스템(검색일: 2022. 4. 30)

### 3) 운영 체계<sup>8)</sup>

#### 관련 부서

- (정책기획관실) 제안제도 운영 총괄, 제안활성화 우수실적자 포상, 제안제도 운영 확인 및 점검 등
- (전부서) 소관제안 심사·채택 및 정책 반영, 채택 제안에 대한 우수제안 선정

8) 강원도청 내부문서 참조



## 운영 시스템

- 강원도청 정책기획관실(주무·총괄부서)은 시책·현안정책 추진에 앞서, 특특 아이디어 공모에 필요한 주민 아이디어 또는 정책의견이 필요한 부서에게 공문으로 공모 주제를 접수함
- 접수된 공모 주제 중, 내부 검토(정책기획관실, 주무·총괄부서)를 통해 공모 주제를 선정
  - 주제 선정 시, 구체적으로 마련된 선정 기준은 별도로 없으며, 접수된 공모 주제들 가운데 가장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주제 선정 및 공모전 진행
- 제안 심사 근거 및 기준
  - 제안을 심사하고 채택하는 사항은 제안 관련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진행
  - 채택제안에 대한 등급 결정 및 심사는 「강원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에 의거하여 정책기획관실(주무·총괄부서)에서 우수제안 심사에 대한 자체계획 수립 후 추진

표 3-3 | 강원도 제안제도 심사기준

항목	내용	배점
효율성 (경제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정의 능률화 정도 및 서비스개선의 효과 또는 예산절감 및 국고수입 증대의 정도 등</li> <li>⇒ 매우 우수(30-25) / 우수(24-20) / 보통(19-15) / 미흡(14-10) / 매우 미흡(9-1)</li> </ul>	30
창의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독창적이며 새로운 내용인지 여부(타 사례의 일부 참고 또는 모방 정도)</li> <li>⇒ 매우 우수(20-15) / 우수(14-10) / 보통(9-7) / 미흡(6-4) / 매우 미흡(3-1)</li> </ul>	20
실시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채택제안을 즉시 실시할 수 있는 완성도 여부</li> <li>• 제안실시에 새로운 예산의 투입 또는 신규인력의 필요성 여부 등</li> <li>⇒ 매우 우수(20-15) / 우수(14-10) / 보통(9-7) / 미흡(6-4) / 매우 미흡(3-1)</li> </ul>	20
적용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른 행정 기관에 적용 가능 정도</li> <li>- 전 행정기관 적용 또는 일부 행정기관에 한정하여 적용 등 범위</li> <li>- 실시 횟수나 빈도 및 수혜 대상자 정도</li> <li>⇒ 매우 우수(10-9) / 우수(8-7) / 보통(6-5) / 미흡(4-3) / 매우 미흡(2-1)</li> </ul>	10
계속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안 실시 효과의 지속성</li> <li>- 제도화 가능 또는 일시적 효과인지 여부 등</li> <li>⇒ 매우 우수(10-9) / 우수(8-7) / 보통(6-5) / 미흡(4-3) / 매우 미흡(2-1)</li> </ul>	10
노력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추진기간, 완성도, 장애극복 등 노력 정도</li> <li>⇒ 매우 우수(10-9) / 우수(8-7) / 보통(6-5) / 미흡(4-3) / 매우 미흡(2-1)</li> </ul>	10
	합계	100

## 4) 심사 기능

### 우수제안에 대한 심사(2017~2021)

- (1차) 각 소관 또는 관련 부서에서 내부 검토 ➡ (2차) 『강원도정조정위원회』 심의  
\* 강원도정조정위원회 : 각 부서 실·국장급 공무원으로 구성, 민간위원 미포함

### 강원 특특 Idea 공모전에 대한 심사

연도	내용
2017년~2018년	• 주제 관련 담당부서 및 정책기획관실
2019년~2021년	• (1차) 주제 관련 담당부서 및 정책기획관실 • (2차) 강원도청 게시판 및 국민생각함 투표 ※ 1차 및 2차 점수 합계를 통해 순위 결정

### My Job Idea 공모전에 대한 심사(2017~2021)

- (1차) 제안 관련 담당부서 ➡ (2차) 각 실·국 주무팀장

### 제도 개선

- 과거 각 제안제도에서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원이 포함된 제안심사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았으나, 2022년 6월말 「강원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등의 개정·시행을 통해 위원회의 재구성을 완료함
  - 제안심사위원회를 대행하던 ‘강원도정조정위원회’ 대신 민간위원이 포함된 ‘강원도 적극행정 위원회’로 변경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

## 5) 홍보 현황

- 최근 5년간 ‘강원 특특’에 관한 별도 홍보 실적 없음
- 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시민 제안제도 활성화를 위해 다각도의 홍보방안을 모색하고 추진
  - (타 지자체 사례 1) 광양시 : ▲민원실에 ‘제안’ 서식 비치 ▲시 홈페이지 배너 표출 ▲시정소식지 홍보 ▲SNS 홍보 등
  - (타 지자체 사례 2) 봉화군 : 온라인 및 오프라인 홍보 방법 마련, 언론홍보 등 제안 제도를 위한 홍보계획 수립·운영<sup>9)</sup>

구분	홍보 방법
온라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봉화군 홈페이지 : 공지사항 및 팝업 게재</li> <li>• SNS(트위터, 페이스북 등) 홍보</li> </ul>
오프라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수막 설치 : 유동인구 많은 지역 등</li> <li>• 포스터 게시 : 읍·면사무소, 관공서 등</li> <li>• 홍보물 : 민원실 비치 및 배포, 이장회의 자료 등</li> </ul>
언론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신문 보도자료, 봉화군 소식지 게재 등</li> </ul>

## 6) 강원도 제안제도 연혁

표 3-4 | 강원도 제안제도 연혁

연도	주요 내용
1998년 9월	• 「강원도민 제안 조례」 및 「강원도 지방공무원 제안규칙」 제정
2011년 7월	• 「강원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 도민 및 공무원 규정 통합)
2011년 11월	• “강원특특(idea.gwd.go.kr)” 정책제안 홈페이지 구축
2014년 6월	• “특특 Idea 공모전” 실시

9) 봉화군(2021. 4) 2021년 「봉화군 혁신 실행계획」

연도	주요 내용
2015년 11월	• “My Job Idea 공모전” 실시
2019년 12월	• “제안 마일리지 우수직원 선정” 실시
2021년 8월	• 강원도 정책 제안 홈페이지 개편

## 7) 그동안 제도운영 성과

### 강원도 정책제안 홈페이지(강원특독, <https://idea.gwd.go.kr>) 개편

- 도 정책제안 홈페이지 디자인 및 기능 개선
- 개별적 운영한 ‘정책제안’, ‘정책포럼’, ‘전자공청회’ 등을 정책제안 홈페이지로 단일화
  - 강원도민들의 제안제도 접근 편의성 제고

그림 3-1 | 강원특독 홈페이지(개편 후)



## 도 제안제도 실시 운영

- 강원도는 제안종류를 ▲주민제안과 ▲공모제안으로 구분함
- 참여유형에 따라 전 국민은 ▲주민제안과 ▲공모제안-특특 IDEA 공모전에 참여할 수 있고, 도 공무원은 My Job Idea 공모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분류함

	제안 종류	참여자	제안 방법
	주민 제안	전 국민	• 정해진 제안 내용이나 기한 없이 자유롭게 제안 참여
공모제안	특특 IDEA 공모전	전 국민	• 특정 주제를 정해 일정 기한 내에 제안 참여
	My Job Idea 공모전	도 공무원	• 특정 참여자를 정하여 일정 기한 내에 제안 참여

## 국민·공무원 제안 접수 및 채택 제안에 대한 반영 현황 분석

### ① 국민 및 공무원 제안 제도 현황

- 제안 접수 현황 분석
  - 국민 제안접수 건수는 ('19년) 500건 → ('20년) 344건 → ('21년) 228건으로 점차 272건 감소 추세
  - 공무원 제안접수 건수는 ('19년) 3건 → ('20년) 20건 → ('21년) 15건으로 '20년 대폭 증가했다가 감소 추세

표 3-5 | 최근 3년간 주민 및 공무원 제안 채택 현황

(단위 : 건)

연도	합계			국민 제안			공무원 제안		
	접수	채택*	불채택	접수	채택	불채택	접수	채택	불채택
2019	503	18 (3.5%)	495 (96.5%)	500	18 (3.5%)	492 (96.5%)	3	0 (0%)	3 (100%)
2020	364	10 (2.7%)	356 (97.3%)	344	7 (2.0%)	337 (98.0%)	20	3 (15%)	17 (85%)

연도	합계			국민 제안			공무원 제안		
	접수	채택*	불채택	접수	채택	불채택	접수	채택	불채택
2021	243	6 (2.5%)	237 (97.5%)	228	6 (2.6%)	222 (97.4%)	15	0 (0%)	15 (100%)
2022	94	2 (2.1%)	92 (97.9%)	85	2 (2.3%)	83 (97.7%)	9	0 (0%)	9 (100%)

\* (채택건수)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제안 중, 관련부서에서 채택한 건수

\* (참고) 강원톡톡 정책홈페이지, e-mail 등 다른 방법으로 접수된 제안은 연도당 10건 미만

• 제안 채택 현황 분석

- 국민 제안채택 건수는 ('19년) 18건 → ('20년) 7건 → ('21년) 6건으로 하향세
- 공무원 제안채택 건수는 ('19년) 0건 → ('20년) 3건 → ('21년) 0건으로 하향세

② My Job Idea 공모전

- 특정 참여자를 정해 일정기한 내에 제안 참여하며, 참여 대상은 도 공무원으로 한정
- 최근 3년간(2019~2021) 총 3회 개최하여 91건 접수 및 14건 채택·시상

연도	제안주제	접수(건)	채택(건)	비고(명, 만 원)
2019	• 본인의 현재 또는 과거 업무(도정전반)에 대한 개선 아이디어	16	7 (43.75%)	• 최우수상 1(각 50) • 우수상 2(각 30) • 장려상 4(각 15)
2020	• 본인의 현재 또는 과거 업무(도정전반)에 대한 개선 아이디어	60	6 (10.00%)	• 최우수상 1(각 50) • 우수상 2(각 30) • 장려상 3(각 15)
2021	• 도정전반에 대한 개선 아이디어 (※ 본인의 현재 업무 제외)	15	1 (6.67%)	• 최우수 1(각 50)

③ 톡톡 Idea 공모전

- 특정 주제를 정해 일정기한 내, 제안 참여(전 국민)

• 3년간(2019~2021) 총 10회 개최하여 822건 접수 및 44건 채택·시상

\* '22년은 상·하반기(6월 및 10월) 진행 예정

연도	차수	제안주제	접수 (건)	채택 (건/률)	비고 (명, 만 원)
2019 (4회)	1	• 고령사회 대비 노인일자리 활성화 방안 • 미세먼지 저감 방안	63	5 (7.9%)	• 아이디어왕 2(각 10) • 참신왕 3(각 5)
	2	• 화재 예방을 위한 실천과제 • 강원도 맞춤형 인구정책 방안	56	4 (7.1%)	• 아이디어왕 2(각 10) • 참신왕 2(각 5)
	3	• 생활폐기물의 재활용 촉진방안	26	3 (11.5%)	• 아이디어왕 1(15) • 참신왕 1(10) • 공감왕 1(5)
	4	• 2024 동계청소년올림픽 캐치프레이즈	71	4 (5.6%)	• 아이디어왕 2(각 15) • 참신왕 2(각 10)
2020 (3회)	1	• 강원도 RC보트 대회 • 강원도 드론 스포츠 대회	152	5 (3.3%)	• 아이디어왕 2(각 20) • 참신왕 3(각 10)
	2	• 「내가 만드는 미래 강원 주택」 공모	37	5 (13.5%)	• 아이디어왕 1(각 30) • 참신왕 1(각 20) • 공감왕 3(각 10)
	3	• '망상지구' 브랜드명 및 슬로건 공모	156	5 (3.2%)	• 아이디어왕 1(각 80) • 참신왕 2(각 50) • 공감왕 2(각 20)
2021 (3회)	1	• 강원도 정책제안 홈페이지 명칭 공모	170	3 (1.8%)	• 아이디어왕 1(각 50) • 참신왕 1(각 20) • 공감왕 1(각 10)
	2	• 1회용 배달용기 절감·재활용 아이디어	60	3 (5.0%)	• 공감왕 3(각 10)
	3	• 자치경찰에게 바란다	31	6 (19.4%)	• 아이디어왕 1(각 50) • 참신왕 2(각 30) • 공감왕 3(각 10)

표 3-6 | 특특 idea 공모전 운영 현황(2014~2021)

등록일자	공모전	공모 주제	주무부서
2014-06-05	2014년 제1회 특특 작은 공모전	불법 주·정차 예방 및 해결방안에 대한 아이디어	기획관실
2014-07-01	2014년 제2회 특특 작은 공모전	여름철 에너지 절약 방안	기획관실
2014-08-01	2014년 제3회 특특 작은 공모전	명절(추석) 준비를 위한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 방안	기획관실
2015-02-02	2015년 제1회 특특 작은 공모전	평창동계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한 아이디어	기획관실
2015-04-01	2015년 제2회 특특 작은 공모전	지역상품(체험, 특산물, 관광 등) 판매 활성화 방안	기획관실
2015-06-03	2015년 제3회 특특 작은 공모전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기획관실
2015-08-07	2015년 제4회 특특 작은 공모전	2018 평창동계올림픽 붐 조성 방안	기획관실
2016-05-23	2016년 제1회 특특 작은 공모전	관광명소 동해바다를 위한 도내 해양관광지(해수욕장) 쓰레기 절감 방안	기획관실
2016-07-04	2016년 제2회 특특 작은 공모전	강원 관광활성화를 위한 외국인 관광객의 도내 유입 방안	기획관실
2016-09-26	2016년 제3회 특특 작은 공모전	강원도형 일자리창출 방안	기획관실
2017-03-08	2017년 제1회 특특 작은 공모전	강원상품권 유통 활성화 방안	기획관실
2017-05-17	2017년 제2회 특특 작은 공모전	강원도 여성 및 아동의 정주여건 개선 방안	기획관실
2017-09-08	2017년 제3회 특특 작은 공모전	봄철 대형 산불 위험성 저감 방안	기획관실
2018-02-26	2018년 제1회 특특 idea 공모전	① 강원도 여성·청년 인구유출 최소화 방안 ② 강원도 사계절 관광객 유치 활성화 방안	기획관실
2018-05-14	2018년 제2회 특특 idea 공모전	미시영터널 명칭 변경 공모	기획관실
2018-09-11	2018년 제3회 특특 idea 공모전	올림픽 유산을 활용한 강원 관광 활성화 방안	기획관실
2019-03-04	2019년 제1회 특특 idea 공모전	① 고령사회대비 노인일자리(자원) 활성화 방안 ② 미세먼지 저감 방안	기획관실
2019-06-03	2019년 제2회 특특 idea 공모전	① 화재예방을 위한 실천과제 ② 강원도 맞춤형 인구정책 방안 (저출산, 인구유입, 고령화 대책 등)	기획관실
2019-08-30	2019년 제3회 특특 idea 공모전	생활폐기물의 재활용 촉진 방안	기획관실
2019-10-22	2019년 제4회 특특 idea 공모전	2024 동계청소년올림픽 캐치프레이즈	정책 기획관실
2020-02-28	「제1회 특특 idea 공모전」	강원도 주관 대회 명칭 공모: ① 강원도 RC보트 대회 ② 강원도 드론 스포츠 대회	정책 기획관실



등록일자	공모전	공모 주제	주무부서
2020-05-22	「제2회 특특 Idea 공모전」	내가 만드는 미래 강원 주택: 20년 후 미래여건을 반영한 강원도 내 저밀도 주택단지 조성방안	정책 기획관실
2020-08-21	「제3회 특특 Idea 공모전」	‘망상지구’ 브랜드명 및 슬로건 공모	정책 기획관실
2021-03-21	「제1회 특특 Idea 공모전」	강원도 정책제안 홈페이지 명칭 공모	정책 기획관실
2021-06-09	「제2회 특특 Idea 공모전」	1회용 배달용기 절감·재활용 아이디어	정책 기획관실
2021-09-29	「제3회 특특 Idea 공모전」	자치경찰에 바란다	정책 기획관실

### 「강원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 등 제도개선 완료

- (필요성) 제안의 숙성·공론화 방안 마련을 위한 조항 신설, 제안심사위원회 재구성을 위한 조항 일부개정, 불채택된 제안을 재심사할 수 있는 조항 신설을 통하여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제안제도 운영 활성화 도모
  - (목적) 조례상 모호한 부분을 명확히 규정하여 자치법규 상호 간 상충을 피하고 자치법규 간 조화 도모
- 개정 주요 내용
  - (3조) 하위의 자치법규가 따라야 할 상위 법령과의 관계를 규정하는 조항 문구를 제외하고, 자치법규 간 적용의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조항 일부개정
  - (6조의2) 다음과 같이 제안 내용의 보완·개선 공론화가 필요한 경우, 6개월 이내의 숙성·공론화를 거칠 수 있는 조항을 신설 제안
    - ☞ 도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제안에 대하여 토론·투표·평가 등을 통해 진행
    - ◆ 접수한 제안 내용에 대해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 전, 채택되지 않은 제안 중 재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리고 채택제안 중 보완·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 (7조 제2항) 제안심사위원회를 대행하던 강원도정조정위원회 대신 민간위원이 포함된 '강원도 적극행정 위원회'로 변경하기 위한 조항 일부개정
  - ☞ 제안심사위원회 변경 사유
    - ◆ 「국민 제안 규정」<sup>10)</sup>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은 국민제안을 공정하게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국민제안 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되어있음
    - ◆ 심사위원을 구성할 경우, 전체 구성인원의 2분의 1 이상 국민(국내에 거주하는 내국인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한정)으로 구성해야 함
    - ◆ 강원도 제안심사위원회는 과거 공무원(국장급 이상)으로만 구성된 위원회의 운영으로부터, 민간전문위원이 포함된 '강원도 적극행정 위원회'로 변경하여 제안 심사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성 제고<sup>11)</sup>
- (제11조의2) 불채택 제안에 대한 재심사 추진 사항
  - ◆ (제1항) 기존에 불채택되었던 제안이 현 제도에 반영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심사를 실시하는 조항 신설
  - ◆ (제2항) 제안자가 기존에 불채택되었던 제안이 현 제도에 반영되고 있는 경우를 인지하여 재심사 요청을 할 경우, 재심사를 실시하는 조항 신설
  - ◆ (제3항) 제2항 요청에 따라 재심사 결과 불채택되었을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제안자에게 통보하는 조항 신설

10) 「국민 제안 규정」 제8조(국민제안의 심사)

② 행정기관의 장은 국민제안을 공정하게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관별 국민제안 심사위원회(이하 "기관별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2조 제1항의 재심사 요청에 따른 재심사, 제14조 제1항에 따른 채택되지 않은 국민제안의 재심사 및 제15조에 따른 자체우수제안의 결정을 할 때에는 기관별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기관별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경우에는 전체 구성인원의 2분의 1 이상을 국민(국내에 거주하는 내국인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 구성해야 한다.

11) 유사 및 중복 위원회 신설을 지양하고자 기존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 활용

## 최근 3년간 제안심사위원회 운영 현황

- 2022년 6월 관련제도의 개선 전까지 제안심사위원회를 공무원 부서장(국장급)으로 구성된 「강원도정조정위원회」로 운영하였으며, 최근 3년간 5건의 제안심사위원회를 서면으로 진행

연도	개최 수	심의내용	비고
2019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반기 채택제안에 대한 등급결정</li> <li>• 하반기 채택제안에 대한 등급결정</li> </ul>	서면
2020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반기 채택제안에 대한 등급결정</li> <li>• 하반기 채택제안에 대한 등급결정</li> </ul>	서면
2021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하반기 채택제안에 대한 등급결정</li> </ul>	서면

\* 심의 방법 : 1차 내부심사(제안 관련부서) → 2차 제안심사위원회 심사

- 「톡톡 Idea 공모전」과 같은 주민참여 공모전은 제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자체 심의계획에 따라 제안을 채택하였으나, 올해('22년)부터 공정성·신뢰성 제고를 위해 제안심사위원회 심의를 추가하여 제안을 심사·채택 예정<sup>12)</sup>

12) 【참고】 「My job Idea 공모전」과 같은 도 공무원 자체 공모사업일 경우, 상황에 따라 제안심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자체 심의계획에 따른 제안 채택 예정(「행정기관의 공모전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이 진행 중이며, 소속 직원을 대상 공모사업일 경우 공모전 심의 적용 대상 제외)

- '21년 공모전 심의 방법
  - 「톡톡 Idea 공모전」 : (1차) 주제 관련 부서심사(70%) + (2차) 온라인투표(30%)
  - 「My job Idea 공모전」 : (1차) 부서 실무심사 → (2차) 실·국 주무담당 심사

## IV

## 국민·주민 참여제도 운영 사례분석

### 1. 국내 지방자치단체 운영의 국민·주민 참여제도

#### 경기도 경기도민 정책축제

- 운영개요
  - 행정 패러다임의 전환, 사회 갈등 심화, 소통공간 부재로 도민주도 열린마당에 대한 필요성 대두, 2019년 제1회 정책축제가 시작됨
  - 주민 참여공간의 모범사례로 주목받고 있는 스웨덴 ‘알메달렌’과 덴마크 ‘폴케외데’ 행사와 같이 국가 또는 지방정부 차원의 사회통합을 위해 다양한 집단 간 소통의 장 구축 필요성 제기
  - 경기도민이 경기도의 주요 의제나 사회정치적 문제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마련하여 지속가능한 속의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정부정책으로 발전시키는 축제를 진행함
  - 참여 단계는 ‘제안 → 심사 → 속의 숙성 → 정책화’ 절차로 구성됨

표 4-1 | 경기도 정책축제 주요 프로세스

제안 단계	→	심사 단계	→	속의숙성 단계	→	정책화 단계
온라인 채널 운영		제안 의제 내부 심의		선정의제의 도민 의견 수렴		정책화 과정
상시 제안		토론 의제 최종 선정		국민참여 토론형 진행		평가보고회 진행

- 운영내용

- 온·오프라인 정책 토론회 진행

- ◆ 온라인 플랫폼 기반 의제 사전 공모 및 자유롭게 의견 개진 가능하며 오프라인 현장에서 2일 간 15회, 총 30회 토론을 진행하고 있음
- ◆ 사전에 토론의제를 공모 및 선정하고 부서간담회를 통해 토론방향을 설정함. 사전토론회 및 참여자를 모집하고 온-오프 집중 홍보, 정책축제에서 선정된 의제를 가지고 숙의 진행
- ◆ 도민이 직접 정책제안과 참여자를 조직하여 토론 운영

- 도민 5분 자유발언

- ◆ 연령별 흥미로운 주제 등을 선정하여 5분 이내 발언
- ◆ 도민의 삶을 풍요롭게

- 요소별 분석

- 대표성 측면에서의 오픈플랫폼으로 제안내용은 모두 공개되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담당부서 1차 의제선정 및 검토 의견과 선정의제 도민 의견 수렴 및 최종 심사 공유를 통해 민주성 확보함
- 정책토론 사전 설명회 및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간담회 진행으로 전문성을 갖추었고 경기도 온라인 플랫폼과 연계하여 서비스 확장 도모 및 홍보함
- 제안된 의제 채택 시 제안자의 정책 축제 운영 및 토론을 주관할 수 있는 일부 권한 부여

표 4-2 | 경기도 정책축제 분석기준별 내용

구분	분석기준	내용
대표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누구나 제한 없이 참여할 수 있는지?</li> <li>제안 등록 공개 여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오픈플랫폼으로 제안 내용은 모두에게 공개되며 누구나 참여할 수 있음</li> </ul>
민주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운영과정에서 적절한 의사결정 방식이 있는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담당부서 1차 의제선정 및 검토 의견</li> <li>선정의제 도민 의견 수렴 및 최종심사 게시·공유</li> </ul>
전문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문제해결 추진과정에서 전문가, 행정 등의 협업이 있는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책토론 사전 설명회 및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민·관) 간담회 진행</li> </ul>
확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운영사례가 타 부처 및 지자체로 확장 가능한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기도 온라인 플랫폼과 연계하여 서비스 확장 도모 및 홍보 가능</li> </ul>
효능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참여자 만족도 및 피드백은 이루어지고 있는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의제 채택 시 제안자의 정책 축제 운영 및 토론 주관 관여</li> </ul>

• 주요 특징

- 경기도민 정책축제는 도민참여 속의민주주의 전통을 창조했으며, 속의민주주의의 대중화 확산을 위해 다각도로 축제를 운영함
- 또한 온라인 참여자들을 위해 도민들이 직접 유튜브로 자을 촬영하고, 실시간 중계로 도민 주도 행사 추진
- 정책 토론회 외에도 5분 이내 발언할 수 있는 ‘도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민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
- 경기도 외 타 시·군 등 참여를 독려하고 홍보 부스도 함께 구성하여 다양한 정책 홍보

표 4-3 | 경기도 정책축제 추진 일정

사전 단계	→ 의제 설정	→ 홍보	→ 토론회
토론의제 공모 및 홍보(홈페이지)	의제 설정 및 토론방향 설정	사전토론회, 참여자 모집, 홍보	온·오프라인 토론회 개최
수시	7~9월	9~10월	10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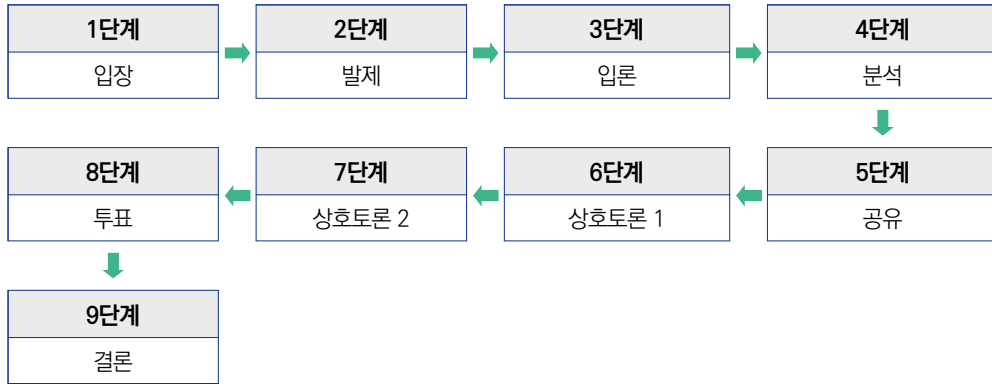
그림 4-1 | 경기도민 정책축제



## 대구광역시 대구시민원탁회의

- 운영개요
  - 대구광역시에서는 대구광역시의 시정에 대한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2008년에 「대구광역시 정책토론청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
    - ◆ 주요 정책에 대하여 시민들이 의견을 공개적으로 제시하고 이를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 개최를 대구광역시장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임
  - 시민들이 민주주의의 본질적 의미를 경험하고 책임감 있는 사회 구성원으로 변화하고 발전하기 위해 소통협치 토대를 마련하고 정책의 입안 단계부터 함께 호흡하고자 2014년 제1회 시민원탁회의를 시작, 2021년 현재까지 진행 중임
  - 대구시민원탁회의는 시민들이 원탁에 둘러앉아 현안이나 주제를 정해서 토론을 하는 것으로 이해관계자와 당사자 시민들의 다양한 측면에서 충분한 논의를 하고 살아있는 토론문화를 정착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 ◆ 국내 유사 사례 : 2013년 서울시 수해대책 시민토론회, 2014년 인천 청소년 원탁토론회, 2015년 안산 시민 100인 대토론회 등
  - 단계 : 입장 → 발제 → 입론 → 분석 → 공유 → 상호토론(1) → 상호토론(2) → 투표 → 결론의 절차로 구성됨

그림 4-2 | 대구시민원탁회의의 주요 프로세스



- 운영내용

- 운영위원회 개최(2~3회)

- ◆ 역할 : 토론주제 선정, 참여 규모, 진행상황 점검 및 사후 평가 등 시민원탁회의를 총괄하고 심의, 의결하는 기구임. 대구시민원탁회의 운영위원회 중심의 토론 주제 선정

- 운영위원회 개최(2~3회)

- ◆ 분과위원회 개최(2~3회) : 슬로건, 토론세부과제, 참여자 구성 등 토론주제별로 구성이 되고 운영위원, 전문가, 관련 부서 등이 참여

- 주제 선정

- ◆ 토론주제는 주요현안에 대해 시민원탁회의의 운영 및 총괄, 자문 역할을 하는 시민원탁회의 운영위원회에서 선정하며 슬로건이나 세부과제는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전 관련부서 의견과 전문가의 자문, 사전설문조사 등을 거쳐 최종 결정하게 됨

- 참여자 모집

- ◆ 일반시민, 전문가(종사자), 퍼실리테이터를 모집하며, 일반시민과 퍼실리테이터는 인터넷 및 전화접수를 통해 모집하고, 전문가(종사자)는 토론주제별로 사무국이나 해당부서의 추천에 의해 참여하게 됨



- 퍼실리테이터 교육(2~3회)
  - ◆ 역할 : 시민원탁회의 토론참여자의 이해를 돕고 서로 다른 입장과 주장을 통합하여 토론참여자들이 스스로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도와줌
- 요소별 분석
  - 대표성 측면에서 운영위원회와 전문가 중심으로 토론주제를 선정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원탁회의 참여자 모집을 위한 기준 마련과 사전설문조사를 통한 진행 점검을 통해 민주성을 확보함
  - 퍼실리테이터 및 관계전문가, 참여자들의 협업을 통한 문제해결로 전문성을 갖추었고 지역정보화수준 우수사례 선정으로 이용자 확산 도모 및 플랫폼의 서비스 확대함
  - 개최 결과의 시민공개 및 담당부서에서 세부 실행계획 수립시행으로 효능감을 높임

표 4-4 | 대구시민원탁회의 분석기준별 내용

구분	분석기준	내용
대표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누구나 제한 없이 참여할 수 있는지?</li> <li>• 제안 등록 공개 여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운영위원회와 전문가 중심으로 토론주제 선정</li> </ul>
민주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운영과정에서 적절한 의사결정 방식이 있는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탁회의 참여자 모집을 위한 기준 마련과 사전설문조사를 통한 진행 점검</li> </ul>
전문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제해결 추진과정에서 전문가, 행정 등의 협업이 있는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퍼실리테이터 및 관계전문가, 참여자들의 협업을 통한 문제해결</li> </ul>
확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운영사례가 타 부처 및 지자체로 확장 가능한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정보화수준 우수사례 선정으로 이용자 확산 도모 및 플랫폼의 서비스 확대</li> </ul>
효능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참여자 만족도 및 피드백은 이루어지고 있는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최결과 시민공개 및 담당부서에서 세부 실행계획 수립·시행</li> </ul>

- 주요 특징
  - 2015년 전국에서 최초로 『시민원탁회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였음

- 조례 제7조(회의결과 조치)는 “원탁회의의 결과에 대해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하며 예산이 소요되는 경우 이를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어 단순 회의로만 끝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음
- 참가자 대상으로 총 2회의 사전조사 설문을 통해 의제에 대해 시민들의 기대와 우려를 교차 확인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내용들을 공유하고 토론하는 것이 특징임
- 하지만 원탁회의 이후 ‘시의 조치계획’을 매회 발표하고 있으나 대부분 기존의 정책 계획 범위 안에 있는 내용이어서 원탁회의의 직접적 영향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따라서 정책적 영향력이 확대될 수 있는 방안 필요

그림 4-3 | 대구시민원탁회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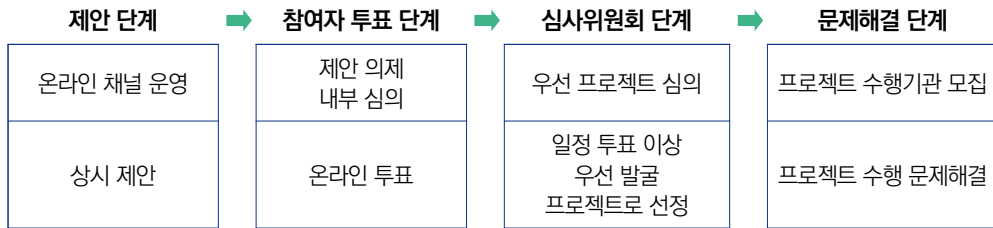


## 제주특별자치도 DSI 가치더함

### • 운영개요

- 관광지역인 제주도에서 발생하는 교통 문제나 환경문제, 취약계층 지원 등에 관해 도민과 관광객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고 데이터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2019년 4월 플랫폼을 구축하여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그해 6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
- 스스로 제주지역 문제를 찾아내고, 디지털기술을 활용하여 해결방안을 제시하며, 함께 풀어가는 온라인 플랫폼으로 주민들이 프로젝트 성과까지 확인할 수 있음
- 단계별 내용 : 제안 → 참여자 투표 → 심사위원회 실시 → 문제해결 단계로 구성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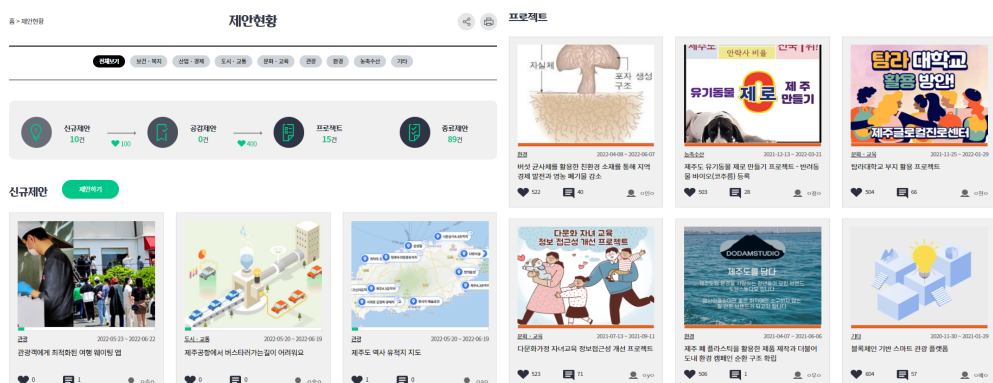
표 4-5 | 제주특별자치도 가치더함 주요 프로세스



• 운영내용

- 2020년 기준 가치더함 회원가입자 수는 총 5,489명이며 9월에 진행된 ‘디지털 사회 혁신 아이디어 경진대회’에 대한 관심 증가로 9월에만 2,747명(50%) 가량 증가함
- 2020년 제안 건수는 총 75건으로 나타났으며 마찬가지로 9월에 57건으로 많은 제안이 등록됨
- 제안을 등록하여 10표의 공감을 얻으면 문제정의 및 해결방안을 등록하고, 공감 50표를 얻은 제안은 클라우드 펀딩, 공공정책 제안, 공공사업화 세 가지 방법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함

그림 4-4 | 제주특별자치도 가치더함 제안현황



- 요소별 분석

- 대표성 측면에서 오픈플랫폼으로 제안 내용은 모두에게 공개 되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30일 동안 공감표 10명 달성 시 문제를 등록하고 추가적 주민공감 50표 획득 시 프로젝트 심사진행 및 프로젝트화를 하면서 민주성을 확보함
- ICT 전문가 및 주민, 지자체 등이 참여하여 문제를 개선 및 해결로 전문성을 갖추었고 지역정보화수준 우수사례 선정으로 이용자 확산 도모 및 플랫폼의 서비스 확대를 하고 있음
- 실제 주민 제안이 프로젝트로 진행된 성과를 보여줌으로써 효능감 제고

표 4-6 | 제주특별자치도 가치더함 분석기준별 내용

구분	분석기준	내용
대표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누구나 제한 없이 참여할 수 있는지?</li> <li>• 제안 등록 공개 여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오픈플랫폼으로 제안 내용은 모두에게 공개되며 누구나 참여할 수 있음</li> </ul>
민주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운영과정에서 적절한 의사결정 방식이 있는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0일 동안 공감표 10명 달성 시 문제등록</li> <li>• 추가적 주민공감 50표 획득 시 프로젝트 심사진행 및 프로젝트화</li> </ul>
전문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제해결 추진과정에서 전문가, 행정 등의 협업이 있는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CT 전문가 및 주민, 지자체 등이 참여하여 문제를 개선 및 해결</li> </ul>
확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운영사례가 타 부처 및 지자체로 확장 가능한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정보화수준 우수사례 선정으로 이용자 확산 도모 및 플랫폼의 서비스 확대</li> </ul>
효능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참여자 만족도 및 피드백은 이루어지고 있는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제 주민 제안이 프로젝트로 진행된 성과를 보여줌</li> </ul>

- 주요 특징

-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구축한 공간에서 시민들이 다양한 의견을 공유 및 제안하고 전문가가 포함된 '스스로해결단' 등 지역문제를 해결할 조직을 구성하여 프로젝트 단계별로 지원을 하게 됨
-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온라인상에서 자금을 모집 및 지원하고 있음(예산 지원이 필요한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원)

- 단순 민원 및 제안을 넘어 사회문제에 디지털기술을 활용한 해결방안까지 제시하고  
도민의 참여를 독려함과 동시에 스스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는 특징이 있음

## 광주광역시 광주시민총회

### • 운영개요

-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의 ‘민족민주화대성회’를 계승하여 광주공동체를 위한 의제를 시민이 제안하고 결정하며 민·관이 함께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실천해 나가는 시민참여 민주주의 한마당으로써 시민총회가 갖는 의의와 시민 대표성을 기념하기 위해 2020년부터 시작됨
- 온라인 민주주의 플랫폼 ‘바로소통광주’를 통해 광주공동체를 위한 의제를 시민이 제안하고 공감하면 광주시민총회에서 시민과 함께 토론하고 투표하여 결정, 결정된 의제 실천의제로서 실천방안을 찾고 함께 실행해 나감
- 단계별 내용 : 제안 → 의제설정 → 광주시민총회 진행 시 → 의제실행 절차로 구성됨

표 4-7 | 광주시민총회 주요 프로세스

제안	→	의제설정	→	광주시민총회 진행	→	의제실행
온라인 채널 운영		(1차) 10개 예비의제		의제 설명, 토론, 투표진행		의제범시민추진위원회 구성
제안공모, 패널모집		(2차) 3개 공론의제 선정		최종 의제 선정		실천다짐대회

### • 운영내용

- 제안 및 공감
  - ◆ 광주정신을 살려 모든 시민이 연대, 협력하여 실천할 수 있는 과제로서 더 좋은 광주를 만들기 위한 미래지향적 실천과제 또는 광주공동체가 직면한 위기나 문제를 해결해야 할 과제

- 시민패널 신청
  - ◆ 광주시민총회 참석 및 최종의제 선정을 위한 현장토론과 투표
- 시민총회 후보의제 투표
  - ◆ ‘바로소통광주’를 통한 온라인 투표, 3개까지 선택 가능
  - ◆ 투표결과는 온라인을 통해 공개되며 3대 후보의제는 온라인 투표결과와 그 밖의 오프라인 투표 등의 결과를 합산하여 선정
- 광주시민총회 진행
  - ◆ 3대 후보의제에 대한 설명, 토론, 투표를 거쳐 최종 의제 선정
- 광주공동체 의제 범시민추진위원회 구성
  - ◆ 최종의제 선정 이후, 의제실천을 위해 시민, 단체, 기관, 전문가 등 각계각층으로 구성
  - ◆ 최종의제 실천을 위한 다양한 방안 모색, 실천 지원방안 마련 등
- 실천다짐대회
  - ◆ 참여 : 의제실천 참여 기관, 단체, 시민 등(코로나19 추이에 따라 조정)
  - ◆ 최종의제에 대한 실천 및 행동 방안 선언, 정책 전시 등
- 요소별 분석
  - 대표성 측면에서 ‘바로소통광주’를 이용한 온라인 등록이 가능하고 기간 내 누구나 자유롭게 제안 및 공감할 수 있으며 최종의제 선정을 위한 시민패널을 구성하고 의제 제안 공감을 통해 민주성을 확보함
  - 시민권익위원회 시민총회 실무기획단과 시민들이 참여하여 투표 및 선정으로 전문성을 갖추었고 정기적 의제 발굴 및 실행계획 수립으로 서비스 확장과 연계를 도모
  - 최종의제에 대한 실천 및 행동방안선언, 정책 전시를 통해 효능감을 극대화

표 4-8 | 광주시민총회 분석기준별 내용

구분	분석기준	내용
대표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누구나 제한 없이 참여할 수 있는지?</li> <li>제안 등록 공개 여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바로소통광주'를 이용한 온라인 등록</li> <li>기간 내 누구나 자유롭게 제안 및 공감 가능</li> </ul>
민주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운영과정에서 적절한 의사결정 방식이 있는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최종의제 선정을 위한 시민패널구성</li> <li>의제 제안 공감을 통한 합리적 결정</li> </ul>
전문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문제해결 추진과정에서 전문가, 행정 등의 협업이 있는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민권익위원회 시민총회 실무기획단 및 시민들이 참여하여 투표·선정</li> </ul>
확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운영사례가 타 부처 및 지자체로 확장 가능한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기적 의제 발굴 및 실행계획</li> <li>수립으로 서비스 확장 및 연계 가능</li> </ul>
효능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참여자 만족도 및 피드백은 이루어지고 있는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최종의제에 대한 실천 및 행동방안선언, 정책 전시를 통해 효능감 극대화</li> </ul>

• 주요 특징

- 제안 및 의견의 경우 바로소통광주라는 온라인 소통 플랫폼을 통해 제안을 공모를 받고 각 단계별로 진행 경과와 선정된 의제를 게시 및 공유하고 있음
- 실제 행사인 광주시민총회에서는 주민 참여 기반 설명, 토론, 투표를 거쳐 합리적인 최종의제를 선정하도록 진행하며, 나온 의제의 실천을 위해 주민을 포함하여 기관, 단체, 전문가들로 구성된 범시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특징임
- 정책효과 확산 및 실행계획 수립을 위해 '실천다짐대회' 개최를 통해 주민들의 효능감 및 만족도 제고

그림 4-5 | 2020 광주시민총회



## 2. 해외 국민·주민 참여제도

### 캐나다 시민의회(Citizen Assembly)

- 의회 밖의 또 하나의 시민합의기구로 주요 쟁점(주로 법, 제도)에 대해 추천으로 구성된 일반시민이 토론함으로써 의사결정에 참여
- 2004년 캐나다에서 입법부를 보완하는 제도적 수단으로 등장함
- 각 국가나 지역 행정이 주도하여 모델을 개발하고 제도화하는 방식으로 1~2년 정도의 긴 시간 동안 30회 이상의 모임과 논의를 진행하여 시민결정의 전문성과 숙의성을 제고함

표 4-9 | 캐나다 온타리오 시민의회 주요 프로세스





- 캐나다 온타리오를 포함한 시민의회 활용사례
  - 주로 10명 이상의 대규모 구성으로 선거구별로 할당하거나 선거제도 관련 의제에 대해 추천과 추천 혼용방식을 통해 대표성과 전문성을 확보함
  - 주로 기간은 1년 이상으로 장기간에 걸쳐 진행함으로써 구성원들이 의제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함

표 4-10 | 해외 시민의회 활용 사례

구분	브리티시 칼럼비아주 (캐나다)	온타리오주 (캐나다)	아일랜드	아이슬란드	캘리포니아 (미국)	
프로젝트	선거제도 개혁 시민회의 ('04년)	선거제도 개혁 시민회의 ('06~'07년)	헌법에 관한 컨벤션 ('13년)	시민의회 ('16년)	헌법개정 실험 ('10~'12년)	캘리포니아 시민 선거구 확정 위원회
의제	선거제도 개혁	선거제도 개혁	헌법 8개 조항 검토	수정헌법 8조 검토	새로운 헌법 제정	선거구 확정
기간	1년	9개월	14개월	1년	2년	2년 7개월
참가인원	시민 160명	시민 103명	시민 100명	시민 100명	시민 25명	시민 14명
참가인원 구성	총 79개의 선거구 각각 선발된 남녀(2명) + 원주민(2명)	선거구마다 시민 1명씩	비정치인 6명, 정치인 3명, 의장 1명	의장포함 100명	지역별, 성별 비례에 따라 대표 선발	지원자 풀로부터 선발+추천
선발방식	주민등록 명부에 기초한 1차 추천 → 자가 선발 → 2차 추천	의장: 임명 → 비정치인 추천정치인: 선거	-	인구통계학적 변인을 고려한 추천	직접 선거를 통해 입후보 → 선출 → 의회 추천	공모 후 인력 풀 구성 → 무작위 선출 → 위원 선발

- 캐나다 온타리오 시민의회 분석기준별 내용
  - 추천제를 통해 대표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사무국에서 지역(선거구) 정치인, 구성원 대표 등으로 구성된 의사결정기구를 운영함으로써 민주성 제고
  - 또한 5단계 진행 과정에서 해당 주제의 전문가, (전직) 정치인이 구성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제공하거나 숙의에 참여

표 4-11 | 캐나다 온타리오 시민의회 분석기준별 내용

구분	분석기준	내용
대표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누구나 제한 없이 참여할 수 있는지?</li> <li>제안 등록 공개 여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추첨제를 통한 대표성 확보</li> <li>사무국에서 참여자에게 모든 자료 공개</li> </ul>
민주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운영과정에서 적절한 의사결정 방식이 있는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무국에서 지역(선거구) 정치인, 구성원</li> <li>대표 등으로 구성된 의사결정기구를 운영</li> </ul>
전문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문제해결 추진과정에서 전문가, 행정 등의 협업이 있는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5단계 진행 과정에서 해당 주제의 전문가, 정치인이 구성원 교육과 숙의에 참여</li> </ul>
확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운영사례가 타 부처 및 지자체로 확장 가능한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타 지역(선거구)에서 운영 모델을 지역여건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적용 가능</li> </ul>
효능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참여자 만족도 및 피드백은 이루어지고 있는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모든 구성원이 교육부터 의사결정까지 전 과정에 주체로 참여</li> </ul>

그림 4-6 | 캐나다 시민의회(Canadian Citizen's Assembly on Democratic Expression)



Digital technologies are changing society.  
Here's how society responds.

### 스웨덴 스터디 서클(Study Circle)

- 1902년 스웨덴의 사회변화를 일으키기 위한 방안으로 시작
- 커뮤니티/지역 8~15명으로 구성된 다양한 그룹들이 매달 정기적으로 모여 지정된 이슈에 대하여 토의, 토론과정이 종료된 후에 모든 참가자는 각 지역사회 단위에서 '액션포럼'을 통하여 미래를 위한 전략을 구성

-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적 뒷받침, 주민들의 자발적인 모임을 통해 지속적인 논의 수행, 국가 전역에서 다양한 모임과 논의가 동시에 진행

표 4-12 | 스웨덴 스터디 서클 주요내용

<b>배경</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스웨덴의 민주주의는 ‘스터디 서클 민주주의’ § 190년대 초, 공업화가 진행되면서 고등교육은 귀족층에 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02년 교육학자이자 정치인인 오스카 올슨이 창안</li> <li>-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공부 모임, 생활개선 모임 조직</li> <li>- 스웨덴 정부가 지원을 결정하면서 일종의 사회운동으로 확산</li> </ul> </li> </ul>
<b>원칙</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비용, 자발성, 평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리더는 팀 내에서 정하되 ‘서로 가르치고 배우는 것’을 기본</li> <li>- “스터디 서클은 스웨덴인에게 합리적 분석력과 비판의식을 심어줬다. 이것이 스웨덴의 사회 변화를 이끈 원동력이 됐다”(올로프팔메, 스웨덴 전 총리)</li> </ul> </li> </ul>
<b>내용</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판적 질문과 대화 형식으로 지역문제의 대안을 탐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단계) 이 주제와 나는 어떤 관련이 있는가? ⇨ 경험과 인식 공유</li> <li>- (2단계) 문제의 본질은 무엇인가? ⇨ 사회적, 문화적 요인 파악</li> <li>- (3단계) 변화를 위해 어떤 접근이 가능한가? ⇨ 계획 세우기</li> <li>- (4단계)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 구체적인 실행방안 세우기</li> </ul> </li> </ul>
<b>성과</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스웨덴 성인 가운데 1/3이 스터디 서클에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6년부터 시민교육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중앙 및 지방정부가 재정지원(보조금 형태)</li> <li>- 스웨덴 전역에서 약 28만 개의 스터디 서클 활동(16년 기준)·북유럽 전역으로 확장</li> </ul> </li> </ul>

- 스웨덴 스터디서클 분석기준별 내용
  -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여 높은 대표성을 가짐
  - 커뮤니티별로 리더는 구성원 합의로 선정하며 운영방식은 커뮤니티 구성원이 정하고 전 과정에 자율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운영
  - 단, 자율성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 반영에 대한 과정은 없음

표 4-13 | 스웨덴 스터디 서클 분석기준별 내용

구분	분석기준	내용
대표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누구나 제한 없이 참여할 수 있는지?</li> <li>• 제안 등록 공개 여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커뮤니티 중심으로 누구나 참여 가능</li> </ul>
민주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운영과정에서 적절한 의사결정 방식이 있는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리더는 팀 내에서 정하며 구성원 전원의 합의로 결정</li> </ul>
전문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제해결 추진과정에서 전문가, 행정 등의 협업이 있는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액션포럼'에 주제별 전문가 참여</li> </ul>
확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운영사례가 타 부처 및 지자체로 확장 가능한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커뮤니티별 스터디서클 운영사례의 확산 및 지역별 상황에 따라 적용</li> </ul>
효능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참여자 만족도 및 피드백은 이루어지고 있는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든 구성원이 전 과정에 주체적 참여 정책 반영에 대한 과정은 없음</li> </ul>

그림 4-7 | 스웨덴 스터디 서클



### 3.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제안제도 인센티브 운영 현황

#### 부산광역시 제안제도 인센티브 운영 현황

구분	주요내용
제안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채택 및 채택되지 않은 제안에 대한 인센티브</li> <li>- (채택제안) 등급별 인사특전 및 포상금<sup>13)</sup> 부여</li> <li>- (채택되지 않은 제안) 포상금 등 지급</li> </ul>
제안처리담당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안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인센티브 부여</li> <li>- (완전수용) 포상금 등 지급</li> <li>- (적극 및 수정수용) 기여도 비중에 따라 주·부 제안자 위치부여</li> </ul>
우수 제안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본인업무에 대한 개선 아이디어 제출 등 제안 참여 실적이 우수한 부서 등에 포상금 지급</li> </ul>
구·군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구·군 제안제도 활성화를 위해 평가결과에 따라 상장(최우수 1, 우수 2) 및 포상금</li> </ul>

#### 전라북도 제안제도 인센티브 운영 현황

구분	주요내용
포상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우수제안자</li> <li>- 최우수 1명(100만 원), 우수 4명(각 70만 원), 장려 4명(각 30만 원)</li> </ul>
직무성과평가 가점 및 상시학습 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성과가점 : 최우수 0.2, 우수 0.1, 장려 0.05점</li> <li>상시학습 : 20시간 이내</li> </ul>
해외 글로벌 벤치마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최우수/우수 4명(* 도청소속 직원에 한함)</li> </ul>

#### 경기도교육청 인센티브 운영 현황

구분	주요내용				
지방공무원 (5급 이하)	교육훈련시간 인정				
	교육·학습유형		인정시간	최대 인정시간	인정근거
	제안 (제안규정에 의한 입상)	입상 (대내·외)	건당 10시간 (대의입상 10시간 추가)	50시간	결과 확인 공문

13) 포상금의 경우 정책지원 방식도 존재하나, 서울시의 경우 예산절감액(또는 추정치)의 일부(상한액 설정 필요)를 포상금으로 부여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음

구분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성과평가 시 가점 부여</li> </ul>												
	<table border="1"> <thead> <tr> <th>평가지표</th> <th>개인가점</th> </tr> </thead> <tbody> <tr> <td>배점</td> <td>• 1점</td> </tr> <tr> <td>측정산식</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조직 기여도</li> <li>공무원 제안</li> <li>경기도교육청 제안심사위원회의 “창안등급” 결정 1건 이상</li> </ul> </td> </tr> <tr> <td>측정요소 세부설명</td> <td>• 측정기간: 당해 연도 1.1.~12.31.</td> </tr> <tr> <td>자료추출</td> <td>• 경기도교육청 주관부서 일괄 추출</td> </tr> <tr> <td>증빙자료</td> <td>• 경기도교육청 행정관리담당관 일괄 제공</td> </tr> </tbody> </table>	평가지표	개인가점	배점	• 1점	측정산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조직 기여도</li> <li>공무원 제안</li> <li>경기도교육청 제안심사위원회의 “창안등급” 결정 1건 이상</li> </ul>	측정요소 세부설명	• 측정기간: 당해 연도 1.1.~12.31.	자료추출	• 경기도교육청 주관부서 일괄 추출	증빙자료	• 경기도교육청 행정관리담당관 일괄 제공
평가지표	개인가점												
배점	• 1점												
측정산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조직 기여도</li> <li>공무원 제안</li> <li>경기도교육청 제안심사위원회의 “창안등급” 결정 1건 이상</li> </ul>												
측정요소 세부설명	• 측정기간: 당해 연도 1.1.~12.31.												
자료추출	• 경기도교육청 주관부서 일괄 추출												
증빙자료	• 경기도교육청 행정관리담당관 일괄 제공												
제안 채택자·실시자 포상	• 제안자와 함께 채택·실시에 기여한 처리담당자(공무원)에 대해 △포상하여 △적극적 심사자세 격려 △제도개선의 동기 부여												

## 의성군 제안제도 인센티브 운영 현황

- 운영목적
  - 분야별 연구모임을 통한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굴 및 우수시책 개발
  - 소속 공무원의 정책개발 역량 강화 및 군정 경쟁력 제고
- 분야 : 군정 전반
  - 6대 분야(행정혁신, 일자리경제 및 청년정책, 농산업유통, 의성형 복지, 문화관광, 지역재정, 업무현안, 주민불편사항 등 기타 관심 분야)
- 운영지원
  - 전체 동아리 : 상시학습 인정, 급량비 지급, 벤치마팅 경비 지원
  - 우수 제안동아리

시상등급	금상	은상	동상	장려	비고
기준점수	95점 이상	88점~94점	81점~87점	70점~80점	
시상금	100만 원	70만 원	50만 원	30만 원	
근무평정가산	0.3점	0.2점	0.1점		팀원전원

## 예천군 제안제도 인센티브 운영 현황

- 경상북도 주관의 제안제도 운영평가<sup>14)</sup>에서 예천군은 1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sup>15)</sup>
  - 경상북도 주관의 제안제도 운영평가<sup>16)</sup>에서 예천군은 1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
- 2021년 평가에서 예천군은 ▲지역 맞춤형 공모제안 실시 ▲시책개발교육 ▲상상디자인단 운영 ▲국민정책디자인단 운영에서 제안 제도 활성화를 통해 지역발전을 위한 아이디어 도출 및 활성화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음
  - 특히 예천군의 상상디자인단은 ▲지역특성을 살린 아이템 발굴 ▲예천군 소속 공무원 구성(2019년 기준, 9개팀 39명으로 구성) ▲예천군 행정발전 관련 다양한 아이디어 제시를 위해 수시 회의 개최 등 행정노력 다각화
- 인센티브 운영
  - 2019년 예천군 상상디자인단 군정발전 제안 발표대회에서 종합 1위 팀에 대해 해외 여행 인센티브 부여

## 해남군 제안제도 인센티브 운영 현황

- 전라남도 주관의 제안 활성화 기관 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sup>17)</sup>
  - 해남군 제안제도는 '19년 3월부터 매월 다양한 군정 현안 주제로 공모제안 실시. 예를 들어 해남배추 등 농산물 판로대책, 인구감소 대응 방안 등 군정 현안에 대한 공모 제안 실시('19년 기준 722건 제안접수, 전년 대비 126% 증가)

14) 경상북도 제안제도 운영평가 기준

- △제안운영실적 △특수시책 △홍보노력도 △자체 공모제안 △생활공감정책참여단 활동실적 △기관장 관심도 등 9개 항목에 대한 심사

15) 예천군 인구동향

- 2017년 4만 9,253명 → 2019년 5만 5,100명 → 2021년 5만 5,802명으로 꾸준히 증가추세

16) 경상북도 제안제도 운영평가 기준

- △제안운영실적 △특수시책 △홍보노력도 △자체 공모제안 △생활공감정책참여단 활동실적 △기관장 관심도 등 9개 항목에 대한 심사

17) 행정안전부의 인구감소지역 지정 고시(제2021-66호)에서 해남군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

- 해남군 제안제도의 특징을 살펴보면, ① 정기적으로 제안제도 시행(매월) ② 제안 주제에 대한 △목적 및 내용 △예시 등 관련 정보 제공 ③ 기타 제안제도 운영 정보 제공 등 제안자 중심의 정보를 상세하게 제공
- 해남군은 군정 도입 가능한 창의적인 정책개발을 위해 ▲정책연구대회<sup>18)</sup> ▲직원 상호간 아이디어 교환 및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내부 직원 전용 제안톡(Talk) 운영 ▲중견간부 시책발굴 ▲1직원 1제안 운동 실시 등
- 인센티브 개선
  - (기존) 정책 제안자에게만 인센티브를 제공 → (2021년부터) 제안을 심사 및 실행하는 실무자에게도 실행 단계별 마일리지 혜택 부여

#### 4. 사례 연구를 통한 시사점

- 참여 제도·사업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
  - 스웨덴의 경우 산발적으로 일어나던 모임이 제도화를 거쳐 ‘액션포럼’을 운영하게 되면서 지역 의제에 대한 지역별 정책화 과정이 추진됨
  - 따라서 중앙 및 지자체 수준의 제도적 뒷받침이 마련되었을 때 다양한 지역으로의 확산은 물론 참여 주체의 확장이 일어날 수 있음
- 참여 사업 운영을 위한 상시적인 지원조직의 필요성
  - 사업 과정 전반에서 상시적으로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지원조직의 마련이 필요함
  - 제주도 가치더함의 경우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상시 조직으로서 ‘스스로해결단’을 구성·운영하여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공유 및 제안하고 전문가와 함께 프로젝트를 단계별로 추진함

18) 2020년 해남군 정책연구대회

- 10개 팀 34명이 참가, △현장소통행정 분야 2건 △살기 좋은 부자농촌 분야 3건 △체류하는 문화관광 분야 3건 △생동하는 지역경제 분야 1건 △감동 주는 맞춤형복지 분야 1건 등 5개 분야 10개의 신규 정책을 발굴



- 운영과정 전반에서 전문가와의 연계 필요성
  - 사업 운영에서 공무원, 전문가 등이 해당 분야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국민(참여자)에게 제공하는 조연자 역할을 수행하여야 함
    - ◆ 자료집 및 강의 제공, 워크숍, 패널토론 참여 등
    - ◆ 다른 한편으로는 해당 분야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정책화 과정을 지원하도록 구조화 할 필요
  
- 지속적 참여를 위한 국민의 인식제고와 교육 필요
  -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과 함께 국민의 자발적 참여를 제고하기 위한 인식 및 교육기제가 필요
  - 이를 위해 참여 제도·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는 하는 인식/교육 프로그램을 제도화 하고 이를 다양한 사업으로 실제화하여 수행할 필요 있음

## V

## 강원도 제안제도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언

### 1. 강원도 제안제도 홍보의 다각화 필요

- 강원도 홈페이지(누리집)를 비롯하여 SNS 등 온라인 홍보의 다양화 필요
  - 제안제도 절차 및 특성상, 온라인을 통해 접수되는 제안 건수가 상대적으로 높음. 이에 대해 국민과 도민 누구나 접근하기 용이하고 쉽게 제안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 채널 마련 필요
  - 2022.6.1. 현재 기준, 강원도 홈페이지를 통해 ‘강원톡톡(정책제안)’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3단계를 거쳐야 함. (1단계) 강원도 홈페이지 → (2단계) 소통과 참여 카테고리 접속 → (3단계) 강원톡톡 홈페이지
    - ◆ (개선안) 이용자 편의 측면에서 강원도 홈페이지 메인화면(첫 화면)에 강원톡톡(정책제안) 홈페이지에 접속 가능하도록 디자인 수정 필요
  - SNS 적극 활용 및 각 SNS의 특성을 고려하여 제안제도의 홍보 활성화 모색 필요
    - ◆ (문제점) 강원도 블로그(<https://blog.naver.com/gwdoraeyo>)에서 ‘제안제도’에 관한 카테고리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제안자들이 과거 홍보물을 파악하는데 많은 시간 소요. 뿐만 아니라 결과 및 성과에 대한 홍보가 없어 제안자가 제안하려는 정책의 중복여부를 점검하는데 어려움 봉착
    - ◆ (개선안 ①) 현재 활용하는 SNS는 고유 특성 및 이용자의 활용적 차원에서 성격이 다름. 따라서 제안제도를 확산하기 위해 SNS 특성에 맞춰 다양한 홍보 방법을 취사선택해야 함. 우선 △인스타그램 △유튜브는 관련 정보를 이미지화하여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제안제도에 대한 보편적 홍보 수단으로 활용할 필요 있음. 다음으로 △페이스북은 홍보·공모하려는 제안제도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 있음. △블로그는 제안제도 정보에 관한 허브역할로 강원도 제안제도의 역사·종류·특성·그동안 성과 등을 일목요연하게 제공할 수 있는 압축적인 기능의 SNS이어야 함

- ◆ (개선안 ②) 강원도 SNS(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의 적극적 활용 필요. △제안제도 소개 △접수방법 등 제안제도 관한 전반적인 내용 소개 필요. 도 공모 제안 시, SNS 게시를 통해 접수율 제고 모색
- ◆ (개선안 ③) 현재 운영 중인 블로그에서 “강원도 29초 영화제”의 제1회 수상작~제4회 수상작에 대한 정보를 별도 카테고리로 구분한 바와 같이, 강원도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제안제도를 범주화하여 홍보 및 성과 관련한 정보제공 필요. 이는 고객에게 정책홍보의 편의성 제공 차원에서 필요함
- (개선안 ④) 기타 홍보방안 강구 필요
  - 강원도 SNS 서포터즈 활용을 통해 홍보방안 확대 및 활성화 필요
  - 신문·라디오 광고 등 언론매체를 통해 제안제도 홍보 다각화
  - 안내문·홍보물을 제작하여 민원실 및 관공서 등에 오프라인 홍보 추진
  - 현수막·포스터를 제작하여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홍보 확대
- ‘강원톡톡’ 홈페이지의 자료 구축(Data Base)의 필요성
  - (문제점) 2022.6.1. 현재 기준, 강원톡톡 홈페이지 개편(2021.7.27.) 이후 홈페이지 정보 구축 현황을 살펴보면 관련 자료가 많지 않음. 2014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톡톡 Idea 공모전’의 경우 그동안 △홍보물 △채택내용 △정책 활용 및 성과 등 다양한 정보가 쌓여 있음에도 이에 대한 데이터 구축 및 자료 제공이 미비한 점은 아쉬운 부분임
  - ◆ (개선안 ①) 강원도 제안제도 홈페이지인 ‘강원톡톡’만의 고유성을 부각시켜, 관련 정보 및 정책 활용 사례 등을 이용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직·간접적인 홍보 기능

- ◆ (개선안 ②) 제공할 정보로는 △근거 조례를 비롯한 △관련 정량적·정성적 데이터 △타 지방자치단체의 유사 사례 △국민 및 공무원 제안제도 현황과 그에 대한 성과 △My Job Idea 공모전 관련 정보 등

## 2. 제안제도 심사위원회의 전문성 강화

- 강원도 제안제도 심사위원회는 실·국장 등 공무원으로 심사위원을 구성하고 민간 위원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 (긍정적 측면) 강원도 정책·제도 현안, 문제 및 개선 방향, 관련 예산 및 관련 조례 등을 입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행정·정책 전문가로 구성
  - (부정적 측면) 공무원으로 구성됨에 따라 폐쇄적이며, 다양한 각도 및 새로운 시각을 통해 행정·정책을 살필 수 있는 유연적 시각의 제한성(think outside the BOX) 등
  - 강원도는 제안심사위원회에 민간위원이 미구성된 점에 대해 2022년부터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제안심사를 위해 △조례개선 △제안심사위원회 재구성 등을 추진
- ◆ (개선안 ①) 근거 조례 개선을 통해 해당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원 참여 필요
- ◆ (개선안 ②) 민간위원은 강원도 내 소재하고 있는 △대학교(예: 강원대학교, 강원원주대학교, 가톨릭관동대학교, 춘천교육대학교, 한림대학교,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등)에 재직 중인 교수 △국책 연구기관(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강원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강릉분원 등)의 박사급 연구원 △관련 분야에서 시민사회단체 구성원으로 장시간 활동해 온 현장활동가(현장전문가)로 구성<sup>19)</sup>
- ◆ (개선안 ③) 급변하는 행정·정책환경에 시의적절하게 대응하며 심사의 전문성·고도화를 확립하기 위해 분야별 민간위원 풀(pool)을 구축·운영 필요

19) 일부 기초 지방자치단체(장수군, 해남군 등)의 제안제도 운영조례를 살펴보면, 제안제도 심의·선정을 위한 심사위원회 구성에서 분야별 전문가를 위촉하여 전문성 및 객관성, 투명성 등 확보

- ◆ (개선안④) 민간위원의 심사참여 단계는 △1단계 심사인 관련 부서에서 검토·선정 과정을 거친 다음 △2차 심사에 참여하고, 2차 심사위원회 구성은 민간전문 심사위원을 비롯한 강원도 실·국장 등이 함께 참여하여 심사

### 3. 제안 주제의 구체화 및 세분화를 통해 제안의 질적·양적 만족도 제고

- 강원도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제안의 주제를 살펴보면, 거시적이며 광범위하여 제안자가 고려해야 할 사항이 넓고 많음
  - 예를 들어 2021년 9월 제3회 톡톡 Idea 공모전 주제는 ‘자치경찰에 바란다’였음
  - (문제점 ①) 제안 범위를 자치경찰사무에 한해 공모 제안을 접수하겠다는 단서조항을 제외하고 △자치경찰에 대한 정의·임무·역할 △강원도에서 자치경찰이 갖는 의의와 기능 △강원도에서 자치경찰이 향후 수행해야 할 범위와 역할 △이번 제안에서 강원도 자치경찰에게 바라는 점 등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없이 주민에게 참신한 아이디어를 요구하는 수준임
  - (문제점 ②) 제안 범위가 넓은 뿐만 아니라 제안제도를 통해 강원도가 제도적·행정 및 정책적·행정서비스적으로 무엇을 얻고자 하려는지 주민 및 제안자 입장에서 알 수 없는 것이 현실임
  - (문제점 ③) 심사기준에서 효율(경제)성을 제안자가 사전에 인지하기 위해선 그동안 자치경찰제도에 직·간접적으로 투입된 예산 및 집행액에 관한 세부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데 관련 홍보(물)에서는 이와 같은 정보가 없음

지방자치단체	조례	주요내용
해남군	「해남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제5조(심사위원회)	•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를 포함하여 전체위원의 4분의1 이하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각 분야별 전문가와 관계 유관기관의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할 수 있다.
장수군	「장수군 발전제안제도 운영 조례」 제7조(제안의 심사)	• 제안심사 시 분야별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위촉하여 심사에 참여시켜야 하며 위촉위원은 장수군정조정위원회조례 제2조제3항 및 제4항에 준한다.

- 이처럼 광의적인 제안주제를 제시했을 때, 관련 분야 전문가는 물론 일반 주민들 역시 명확하고 유의미한 제안사항을 제시하기 난해함
  - (문제점 ①) 관련 부서 입장에서 접수된 제안이 계획·예측했던 바와 달리 △저조한 접수 건수 △품질 저하의 제안 내용이 접수될 가능성이 높음
  - (문제점 ②) 심사위원회에서 현장에서 유의미하고 적시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제안을 심사 및 채택하기 어려움
- 제안의 질적·양적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개선이 필요함
- (개선안) 제안이 필요한 부서에서 구체적이고 명확한 제안 범주를 마련하여 제안제도에 제시
  - 제안제도를 통해 행정적·정책적 효용성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제안자(시민 및 전문가 등)가 본 제안에 대해 심층적이며 다각도로 접근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 행정·정책의 가시적 시행과 연계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에 관한 상세한 정보(예: 관련 예산은 총 ①①①원으로 해당 제안 채택 시, ①①①원 투입 예정 / 예산은 검토 및 논의 중, 확보 예정, 확보, 집행 중 등)를 함께 제공

#### 4. 제안제도 심사·채택 참여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제도 활성화

- (개선안 ①) 제안채택 우수실적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 가점 부여
  - 부여대상 : 제안채택 담당자(공무원 대상)
  - 관련근거 : '2022년도 인사운영계획'
  - 심사방법 : 제안 채택여부 확인, 채택제안에 대한 추진계획 수립·시행 및 예산확보 등 실시노력도 종합심사
  - 반영내용

표 5-1 | 제안제도 채택 우수실적자에 대한 가점항목 및 배점 등

가점항목	부여기준	배점	비고
제안채택 우수실적자	3개 이상	0.3점	* 최대 0.3점 이내 부여
	2개	0.2점	* 제안 채택여부, 채택제안에 대한 추진노력 등 종합심사를 거쳐 우수실적자 선별
	1개	0.1점	

- (개선안 ②) 제안채택 실적부서에 대한 보상제도 부여
  - 부여대상 : 제안채택 개발·도입·채택 및 성과도출 부서(팀·과 대상)
  - 관련근거 : 강원도 내부 보상체계 마련
  - 장기적인 제안채택 제도 운영 및 그에 따른 가시적인 성과 도출을 기대하기 위해 보상체계는 공무원 개인뿐만 아니라 업무수행을 추진하는 단위, 즉 부서(팀·과)에 대한 보상 필요<sup>20)</sup>
  - 제안제도 특성상 단기성과를 도출하는 과제가 있는 반면, 중장기적 추진을 통해 성과가 나타나는 경우 있음. 또한 다양한 제한으로 즉시 해당 제안제도를 운영할 수 없으나, 추후 정책·행정환경 조성을 통해 추진 및 성과를 꾀할 수 있다는 점 등 성과측정을 다각화하여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 보완·검토 필요
  - 제안제도에서 도출된 정책 추진 등 공직자(공무원)가 수행하는 업무는 1년 단위로 성과가 측정되기 어렵거나 그럴 경우 성과가 왜곡될 가능성이 큰 경우가 많음. 그러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제안제도에 관한 보상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경우,
    - ▲평가와 보상을 업무 수행 주기에 맞게 조정 ▲장기적인 보상체계 구축 필요<sup>21)</sup>
    - ▲공무원 개인 보상이 아닌 해당 공무수행 부서(팀·과)에 대한 보상 필요

20) 이근주(2016)에 따르면 공직에서 많은 부분 개인적 역량 및 활동 수준과 함께 팀·과 등 부서의 협동·협업이 필수적인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

- (문제점) 우리나라 공직 사회에서 보상(인센티브)은 개인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 (해결책) 업무수행 특성을 반영하여 개인에 대한 보상과 함께 업무수행 단위, 즉 부서(팀·과) 중심의 보상체계 강화 필요

21) 공직자(공무원) 보상 체계는 ①보상형태에 따라 △금전적 보상 △비금전적 보상으로 구분되며, ②보상시점 및 공무원 수행 업무내용·수행수준과의 밀접성 혹은 시간적 근접성을 기준으로 △직접보상 △간접보상(혹은 지연된 보상)으로 나뉨

구분	금전적 보상	비금전적 보상
직접보상	보수(봉급 및 수당), 성과급 등	승진, 훈·포상
간접(지연)보상	연금	휴가, 복지프로그램, 훈·포상 등

- (개선안 ③) 주민참여예산제와의 연동으로 승진을 위한 가산점 부여 검토
  - 부여대상 : 제안채택 담당자(공무원)
  - 심사방법 : 강원도 주민참여예산제에서 검토·평가하여 채택되어 예산편성된 행정·정책제안에 대한 제안담당자(공무원)에 대해 승진을 위한 가산점 부여 검토 필요
  - 주민과 소통·협업을 통해 행정·정책을 마련하고 그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등의 공로를 인정하고, 승진에 필요한 사항을 제공함으로써 공직 만족도 및 업무만족도 제고 방안 마련
  - 관련법 정비 : 「지방공무원보수규정」(제15조 제4항), 「강원도제안제도 운영 조례」(제15조), 「강원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제17조) 등에 대해 체계적 정비
- (개선안 ④) 제안 마일리지제도 운영 실시
  - 대상 : 제안심사·채택 담당자
  - 주요내용 : 제안활동 참여에 따른 마일리지 점수 부여, 고득점자순 시상

표 5-2 | 제안제도 제안 마일리지제도 운영 방법(변경 전 및 변경 후 비교)

변경 전	변경 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안자와 심사·채택자 통합하여 마일리지 운영 후 고득점자 시상</li> <li>* '21년 우수직원 3명 시상(상장 및 강원상품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안자와 심사·채택자 나누어 마일리지 운영 후, 각 분야 고득점자 시상 예정</li> </ul>

- 시상내용 : 도지사 상장 및 시상금(강원상품권)
- (개선안 ⑤) 2023년 조직성과평가 가점 추진
  - 부여대상 : 제안제도 활성화 우수 부서
  - 평가내용 : 제안심사·채택, 채택제안에 대한 추진계획 수립여부 확인 등 실시노력도 종합심사
  - 평가결과 : 제안 우수부서 특별가점 부여
  - \* 2022년 조직성과평가 가점 항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바, 2023년 조직성과 평가 항목으로 선정되기 위한 절차 진행



## [참고] 제안제도 활성화를 위한 학습조직화 전략

- 공무원의 제안제도는 법률적 및 행정·정책학적 측면에서 적극행정에 속함
  - 「공무원 제안 규정」 제21조(우수기관 등에 대한 포상 등) 제2항에서 채택제안의 실시에 직접적인 공로가 있는 공무원을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4조 제1항 및 제15조 제1항<sup>22)</sup>에 따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 및 인사상 우대조치할 수 있다고 명시
- 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 및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sup>23)</sup>

### 22)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4조 제1항 및 제15조 제1항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등, 제14조 제1항)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반기별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해야 한다.
  1.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여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
  2. 창의적·도전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성과 달성을 위해 노력한 공무원
  3. 그 밖에 적극적인 업무태도로 소속 공무원에게 모범이 되는 공무원
- (인사상 우대 조치 등, 제15조 제1항)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4조에 따라 선발된 우수공무원 또는 유공공무원에게 적극행정의 성과, 선발된 공무원의 희망, 인사운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인사상 우대 조치(특정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해당 인사 관계 법령에 따른 인사상 우대 조치로서 다음 각 호의 인사상 우대 조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중 하나 이상을 부여해야 한다.
  1.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2.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3 제1항에 따른 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 단축
  3.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4 제3항 제2호에 따른 근속승진기간 단축
  4. 「공무원보수규정」 제1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특별승급
  5.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에 따른 성과상여금 최고등급 부여, 「공무원보수규정」 제39조에 따른 성과연봉 최고등급 부여 또는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20조에 따른 성과계약 등 평가 최상위 등급 부여. 이 경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 제6항에 따라 특별성과가산금을 함께 지급할 수 있으며, 같은 항에도 불구하고 근무성적이나 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상위 2퍼센트 이내에 해당하지 않는 공무원에 대해서도 지급할 수 있다.
  6.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에 따른 가점 부여
  7.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 제13항에 따른 포상휴가
  8. 그 밖에 희망 부서로의 전보, 교육훈련 우선 선발 등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인사상 우대 조치

### 23) 적극행정 근거 규정

근거법률	주요내용
헌법 제7조	①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정의)	1. '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적극행정의 유형화
  - 행태적 측면
    - ◆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노력이나 주의의무 이상을 기울여 맡은 바 임무를 최선을 다해 수행하는 행위 등
    - ◆ 업무관행을 반복하지 않고 가능한 최선의 방법을 찾아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등
    - ◆ 새로운 행정수요나 행정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새로운 정책을 발굴·추진하는 행위 등
    - ◆ 이해충돌이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이해조정 등을 통해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등
  - 규정의 해석 및 적용 측면
    - ◆ 불합리한 규정과 절차, 관행을 스스로 개선하는 행위 등
    - ◆ 신기술 발전 등 환경변화에 맞게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적용하는 행위 등
    - ◆ 규정과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가능한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업무를 추진하는 행위 등
- 따라서 제안제도는 공익을 위해 창의성 및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공무를 수행하는 행위로, 새로운 행정수요 및 행정환경 변화에 선제적 대응함으로써 새로운 정책·행정 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한다는 면에서 적극행정이라 볼 수 있음
- 적극행정 구현을 제고하기 위해 요구되는 창의적 리더십으로 5가지 요소 제언<sup>24)</sup>
  - 첫째, 공무원 개개인에게 일에 대한 의미 및 가치 부여 필요
    - ◆ 상명하달식 업무배분이 아닌, 일의 취지 및 의미에 대한 설명과 가치를 부여하는 리더십 선행
    - ◆ 공무원이 실행하는 공적 업무의 영향력 및 파급력에 대한 인지를 도우며, 공공가치에 대한 교육기회 제공 필요
  - 둘째, 권한위임을 통한 자율성 배양 및 영향력 확대 중요

24) 김기현(2021), 적극행정 구현을 위한 창의적 리더십 요인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 셋째, 공무원의 역량 제고 및 학습 기회 제공 중요
  - ◆ 적극행정은 법·행정을 넘어 다양한 이해관계와 사업분야에 관한 지식 필요
  - ◆ 업무에 대한 기술·지식습득 기회 부여 및 부족한 적극행정에 대해 이해를 돕고 다양한 지식 습득할 수 있는 학습기회 보장
- 넷째, 새로운 도전과 창의적 아이디어에 대한 인정 필요
- 다섯째, 적극행정 문화의 정착 필요
- 특히 적극행정을 위한 창의적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 행정기관이 그 소속 공무원의 자발적 참여와 창의적 제안을 통해 행정을 보다 합리적·능률적으로 추진하며 의사 결정과정에 관련 공무원의 참여를 이끌고자 제안제도를 추진하려는 목적임
  - 따라서 제안제도는 소속 행정기관의 발전과 개인(공무원)의 성장을 함께 충족시키기 위한 참여활동이라 할 수 있음.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목적 달성을 이루게 됨
    - ◆ 첫째, 조직 구성원의 창의 연구를 장려하고 행정의 질 향상 및 업무개선을 피함과 동시에 구성원의 행정 참여 의식을 고양시킴으로써 바람직한 조직(직장)풍토 조성 및 조직발전에 기여
    - ◆ 둘째, 개인의 창의 연구의욕을 고취시켜 그 제안에 의해 업무개선의 촉진을 도모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에 기여
    - ◆ 셋째, 구성원들의 창의력 발휘, 행정참여 의식의 고취와 기관의 업무개선 향상을 통한 자긍심과 만족감을 느끼게 하는 것
- 궁극적으로 적극행정을 위한 제안제도 활성화를 위해 강원도는 조직문화를 개선하고 개개인의 학습의지를 발전시키기 위한 문화를 육성해야 함
- 뿐만 아니라 「강원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개정에서와 같이 제안내용에 관한 숙성 및 공론화 운영(안 6조의2) 모색을 위해 관련 공무원의 역량제고와 해당 부서의 학습력 강화가 함께 이뤄져야 함
  - 공무원 개인적 차원에서 역량 제고 및 학습기회 마련 추진

- 부서(팀·과) 단위에서 학습조직(Learning Organization)<sup>25)</sup> 문화 구축 필요
  - ◆ 특히, 제안제도 활성화를 위한 강원도청 내 부서(팀·과 등)의 학습조직화는
    - ① 시민과 고객의 경험과 통찰력 활용 ② 학습을 통한 투명하고 정확한 대응적 위기관리와 이해관계자간 실시간 소통 확대 ③ 훈련 및 시뮬레이션 제공 등으로 보다 적극적인 행정·정책서비스 제공
- 주민이 제시한 다양한 제안들을 검토부서에서 제안심사 및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숙성·공론화 과정을 거침
  - ◆ 제안자-담당 공무원이 결합된 학습공동체를 구성하여, 일정기간 또는 수차례 워크숍 등을 통해 아이디어·의제를 고민하고 해결책을 도출·제안하는 방식, 즉 청년 (소셜)벤처 경연대회 등에서 주로 활용되는 “해커톤(hackathon)” 방식의 제안 대회 등을 추진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 이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 및 부서는 제안내용에 대한 이해-단기 및 중장기적 정책의 파급효과-관련 정책과의 연계성 등 다양한 내용 학습 필요
  - ◆ 이와 같은 학습조직의 구조화는 조직을 하나의 학습 시스템으로 여김으로써 조직 내 모든 구성원들이 지식·기술·정보를 획득 및 공유하면서 활용해야 달성할 수 있음<sup>26)</sup>

25) 학습조직(Learning Organization)이란 조직구성원들이 진정으로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창출하기 위해 끊임없이 자신들의 능력을 계발시켜 나가고, 창의적·개방적 사고가 장려되며, 집단적인 열망을 자유롭게 표출할 수 있는 동시에 구성원들이 함께 학습해 나가는 방식을 지속적으로 배울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조직(P. Senge)

- 다른 사람들에 의한 지시나 강압이 아닌 조직구성원 모두가 자발적으로 새로운 지식창조·획득·공유 등의 활동을 통해 끊임없이 변화하는 조직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변화를 창출할 수 있는 조직임
- 이와 같은 학습조직은 조직 전체 차원에서 지식이 창출되고 이를 기초하여 환경적응력 및 경쟁력을 증대시켜 나갈 수 있는 조직으로 성장하게 됨

26) 학습조직 문화 정착을 위해 ①조직구성원의 마인드, 사고방식, 학습전략 등을 포함한 인적 자원 확보 ②학습조직의 구축·활용을 장려하는 조직 문화적 차원 구축 ③조직구조 및 운영방식을 포함하는 관리 체계 등이 마련되어야 함

## 정책제언(요약)

### 1. 강원도 제안제도 홍보의 다각화 필요

- 강원도 홈페이지(누리집)에서 바로 '강원톡톡'으로 연결되도록 노출 제고, 디자인 개선 및 '강원톡톡'만의 고유성을 부각시킨 자료 구축(Data Base) 및 다양한 정보 서비스 제공 등 정책소통 기능 강화
- 인스타그램, 유튜브, 페이스북, 블로그 등 주요 SNS별 특성에 따른 홍보전략 마련, 강원도 SNS 서포터즈 활용, 언론매체 등 홍보채널 다각화, 주민의 왕래가 잦은 주민센터·공공기관에 홍보물 제작 및 비치 등 온라인 홍보 다양화

### 2. 제안제도 심사위원회의 전문성 강화 및 고도화

- 강원도는 2022년부터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제안심사를 위해 조례개선 및 제안 심사위원회 재구성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주무부처의 검토를 마친 후 교수·현장 활동가 풀(Pool) 구성 등을 통해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원 참여를 확대

### 3. 제안 주제의 구체화·세분화를 통해 제안의 질적·양적 만족도 제고

- 제안이 필요한 부서에서 구체적이고 명확한 제안 범주를 마련하여 제시
- 제안자가 심층적이며 다각도로 접근할 수 있도록, 관련 제안 주제에 대한 행정적·정책적 효용성 및 예산 관련 현황 등의 정보를 구체적으로 제공

### 4. 제안제도 심사·채택 참여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제도 활성화

- 담당 공무원에 대한 제안채택 우수실적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 가점(최대 0.3점 이내) 부여, 주민과 소통·협업을 촉진시키기 위해 주민참여예산제와의 연동으로 승진을 위한 가산점 부여, 제안활동 참여에 따른 마일리지 점수를 부여 시상하는 "제안 마일리지제도" 운영 실시 등
- 제안채택 후 단기적 성과뿐만 아니라 중·장기적 관점에서 성과를 창출한 실적 부서(팀·과 단위)에 대한 금전적·비금전적 보상제도 마련, 심사·채택, 추진계획 수립여부 등 실시 노력도의 심사를 통해 제안제도 활성화 우수 부서에 대한 차기 년도 조직성과평가 가점 추진 등

## 참고문헌

### 문헌자료

- 김찬동(2014), 지방자치시대 주민참여 제도화방안, 서울연구원.
- 박정윤·최현선(2020), 국민제안제도의 사회적 가치 방향성과 실현역량 증대를 위한 연구, 현대사회와 행정(제30권 제2호).
- 사단법인 이음(2020), 국민참여 정책제안 플랫폼의 현재와 미래, 행정안전부.
- 사단법인 이음(2021), 국민참여 성과분석 및 발전방안 연구, 행정안전부.
- 송경재(2020), 사회적 자본은 시민참여를 강화하는가?: 사회적 자본과 투표참여, 시민단체참여를 중심으로, NGO연구(제15권 제2호).
- 어용일(2009), 제안의 목적은 '개선'이 아니라 '목표 달성', 동아비즈니스리뷰(제29호), 2009. 3.
- 이근주(2016), 공무원보상: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행정포커스(2016 5+6 NO.121), 한국행정연구원.
- 이명주(2019), 시민주도형 '참여제안' 제도에 관한 탐색적 연구: 시민소싱 공동생산 사례를 중심으로, 2019 한국정책학회 동계학술대회.
- 재단법인 외글(2019), 광역지방자치단체 및 중앙행정기관의 정책제안플랫폼 실태와 개선방안연구.
- 충청북도교육정보원 충청교육정책연구소(2021), 충청북도교육청 공무원 제안 제도 활성화 방안.
- 하혜영·박치성(2008), 지방정부의 온라인 주민참여 분석: 강남구 온라인 주민설문의 내용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제17권 제2호).
- 한국행정학회(2019), 사회적 가치와 공공가치에 관한 연구, 사회적가치연구원.

### 웹사이트

- 강원톡톡(<https://idea.gwd.go.kr/html/main/index.do>).
- 경기도민 정책축제(<https://policy.gg.go.kr/>).
- 광주시민총회(바로소통광주)(<https://barosotong.gwangju.go.kr/contentsView.do?pageld=platform112>).
-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http://www.law.go.kr)).
- 대구시민원탁회의(<https://daeguwentak.kr>).
- 자치법규정보시스템(<https://www.elis.go.kr>).
- 제주특별자치도 DSI 가치더함(<https://www.jejudsi.kr/>).